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KREI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 동 원 전문 연구원
박 혜 진 연구 조 원

KREI

연구 담당

김 동 원	전문 연구원
박 혜 진	연구 조원

머 리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효율적인 농정여론 수집을 위해 현지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당해 연도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2004년도 조사 결과를 '93년 UR 협상 타결 이후 일관되게 조사문항에 포함했던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방농업시대 농촌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한-칠레 FTA 발효와 UR 협상 결과 10년간 유예되었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때로 그 어느 해보다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던 점을 감안, 개방논의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견해와 정책요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정현안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정부가 개방에 대응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쌀산업, 농지제도, 협동조합 개혁, 농가소득 안정, 국제농업 협상 등 세부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에 포함함으로써 이 조사가 향후 119조 투융자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 대책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모쪼록 이 조사 보고서가 농정의 1차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5.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2004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791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2004년 농촌 생활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는 농업인은 10명 중 2명(20.3%)꼴로 나타났고, 2003년과 비교해서는 10명 중 1명꼴(10.2%)로 나타나 2003년 조사 결과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집계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는데,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중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에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1.8%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농업인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를 주문하였다.
- 농업개방 진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돼 2003년 조사 결과보다 적극 대응할 의사가 5.3%p 증가하였다.
- 농업인 52.9%는 WTO/DDA 농업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는데, 정부의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16.8%, ‘잘 못하고 있다’ 48.5%로 집계됐으며, 부정적인 인식 요인은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반수가 넘는 농업인(51.2%)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실익이 우선’이라고 응답하였고,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을 꼽았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

응’(17.7%) 등을 꼽았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에 대해서는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은 34.5%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았다.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도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는 DDA 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4%가 동의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농촌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기대했으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농업인은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났고,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

제'를 가장 많이(46.8%) 꼽아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고,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가 확대될수록 농가의 불안심리도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이 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2004 Poll Result on Farmers' Attitude Changes and Pending Problems

This poll was conducted with 2,000 local correspondents from November 26 to December 18 of the year 2004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for their research. The following data is the results analyzed from the collected 791 questionnaires.

2 out of 10 (20.3%) answered that their living standard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5 years ago.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ir living standard seems to be slightly relieved as only 1 out of 10 (10.2%) answered ‘improved’ compared to year 2003.

However, 67.8% predict that the rural economic will be ‘weaker than now’ within next 5 years. It shows that they still have a higher sense of uneasiness about their future.

The result also shows that 20.5% (2 out of 10) are ‘satisfied’ with their occupation. It's a 4.7% higher number than the previous year and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ir occupation has been increasing during the last consecutive 3 years.

7 out of 10 are now planning to actively correspond to the opening of Korean market to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It's a 5.3% higher number than the previous year and shows they have more positive will to deal with the problem.

‘The co-op reform’ (31.1%)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asure toward agricultural rural areas’ (25.1%) were chosen as the most effective agricultural policies promoted during the last 1 year.

On the other hand, the poll shows that the farmers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 in ‘the distribution reform for securing the pric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19.3%) and “the active correspondence toward global agricultural negotiations” (17.7%).

4 out of 10 (40.7%)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Grain Management Act while 3 out 10 (29.3%) answered that it is ‘appropriate’ on the general issue of fixing the food administration system.

62.4%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fixing the farmland system and 63.1% made a positive remark on the amendment of the Farmland Act.

33.7% answered that the co-op reform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ile 46.8% still feel that ‘the issue regarding remuneration of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its executives’ requires the serious attention.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e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KREI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1
3. 자료처리 및 분석	4

제2장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20

제3장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1. 농업개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27
2. 농업 개방과 관련한 농업정책 인식 및 요구	31

제4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

1. 참여정부 농정 2년의 평가와 기대	42
2.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47
3. 농지법 개정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견해	52

제5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60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62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80
부록 - 조사표	90
참고 문헌	99

KREI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3
------------------------------	---

제2장

표 2- 1. 5년 전과 비교한 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6
표 2- 2. 전년과 비교한 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7
표 2- 3.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4)	8
표 2- 4. 2004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9
표 2- 5. 도시와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10
표 2- 6.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연도별 변화('95-'04)	11
표 2- 7.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13
표 2- 8. 농촌 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14
표 2- 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15
표 2-10.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16
표 2-11.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17
표 2-12. 농사를 짓게 된 계기	17
표 2-13. 직업으로서 농업과 타 산업과의 비교	18
표 2-14.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생활 비교	19
표 2-15.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싶은 의향 여부	20
표 2-16.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	22
표 2-17. 농사와 관련한 애로사항	25
표 2-18. 1년 후 농업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26

제3장

표 3- 1.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인식	28
표 3- 2.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한 견해	29
표 3- 3. 농업개방 진전에 따른 농가 대응	31
표 3- 4. 농업개방과 관련한 통상협상의 원칙에 대한 견해	32
표 3- 5.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제협상 대처능력에 대한 견해	33
표 3- 6.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제협상 대처에 대한 불만 요인	33
표 3- 7.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한 견해	34
표 3- 8. 쌀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	35
표 3- 9.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한 국내 쌀산업 대책에 대한 반응	36
표 3-10. 쌀 협상 등 감안 2005년 벼 재배면적 조정 여부	38
표 3-11.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인식	39
표 3-12.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평가	40
표 3-13.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40

제4장

표 4- 1. 농업정책 1년 전반에 대한 평가	43
표 4- 2. 참여정부와 지난 정부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비교	44
표 4- 3. 국제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45
표 4- 4. 농업정책 중 가장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	46
표 4- 5.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47
표 4- 6.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한 견해	48
표 4- 7.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방안 불만족 요인	49
표 4- 8.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시 경작면적 조정 여부	50
표 4- 9.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51
표 4-10. 양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견해	51
표 4-11. 공공비축제 도입 시기에 대한 견해	52

표 4-12.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	53
표 4-13.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54
표 4-14. 농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	55
표 4-15. 농지법 개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56
표 4-16. 협동조합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57
표 4-17.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	58
표 4-18. 협동조합 개혁주체에 대한 견해	59

KRE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8
그림 2-2.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평가와 기대 변화	12
그림 2-3. 최근 10년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16
그림 2-4.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23

KREI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 이래 운영해 온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 연도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해 농업인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다.
- 2004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한-칠레 FTA 발표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인 점을 감안,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업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여, 정책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

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791건(유효응답률 39.6%)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항목은 농업인 의식 변화에 대한 부분 15문항,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의식 13문항,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20문항 등 48문항과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한 9문항 등 총 57문항으로 설계하였다.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분석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137명(1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이 57.0%, 60세 미만이 43.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사는 지역 형태별로는 준산간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야, 산간, 도시근교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영농규모는 0.5~1ha 미만이 2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1~1.5ha가 22.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력별 분포는 중졸(31.1%)과 고졸(45.1%)이 대다수였고, 대졸(퇴) 이상도 61명이 응답하였다.
- 주 소득작목별 분포는 수도작이 5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수(14.3%), 시설원예(10.8%), 축산(8.8%), 노지채소(6.9%), 특작(6.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간 소득규모 분포는 2천만원 미만이 64.8%, 2천만원 이상이 35.2%로 나타났다.¹⁾

1) 조사 대상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모범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지역	강원	59	7.5
	경기	83	10.5
	경남	117	14.8
	경북	111	14.0
	전남	137	17.3
	전북	88	11.1
	제주	17	2.2
	충남	117	14.8
	충북	62	7.8
연령	60세미만	334	43.0
	60세이상	442	57.0
학력	한학	6	0.8
	국졸	118	15.2
	중졸	241	31.1
	고졸	350	45.1
	대졸(퇴)이상	61	7.9
영농규모	0.5ha미만	42	5.4
	0.5~1ha미만	197	25.4
	1.0~1.5ha	174	22.4
	1.5~2ha미만	133	17.1
	2~3ha미만	116	14.9
	3ha이상	115	14.8
주재배작목	수도작	389	50.4
	과수	110	14.3
	노지채소	53	6.9
	축산	68	8.8
	시설원예	83	10.8
	특작	48	6.2
	기타	21	2.7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512	64.8
	2천만원이상	278	35.2
지대별형태	평야지대	181	23.4
	산간지대	169	21.8
	준산간지대	355	45.8
	도시근교	70	9.0

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Cleaning 과정을 거쳐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 통계 처리하였고, Excel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 분석 방법은 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농정평가 등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연령·경작규모·학력·농사경력 등을 독립변인으로 교차분석해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와 '93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농사와 관련해 어떤 요인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봄으로써 당해 연도의 농업 여건을 가늠하고, 차기 연도 농업정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뒤야 할지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항목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농정 요구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 농업인들은 현재의 농촌생활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연도별 변화 경향 분석을 통해 개방농정기라고 할 수 있는 최근 10년간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1.1.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과 기대

-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을 5년전과 비교한 의식을 살펴보면, 농업인 20.3%는 2004년 농촌의 생활수준이 ‘5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고 응답해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조사 결과에 비해 2.2%p 높아졌으나, 여전히 과반수에 가까운(48.7%) 응답자는 ‘나빠졌다(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합산)’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히 뚜렷하였다.

-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자의 소득 분포는 2천만원 미만계층에서 2천만원 이상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보다 60세 미만의 계층에서 뚜렷이 나타나 소득이 낮고 젊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전년(2003년) 생활과 비교해서는,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는 응답이 10.2%로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전년(5.0%) 보다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2배 이상 늘었고, ‘못해졌다’(약간, 매우 못해짐 합산)는 응답은 46.7%로 전년보다 10.6%p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5년 전과 비교한 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n=759, 단위 :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		약간나빠짐		매우나빠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9	2.8	55	16.8	90	27.5	101	30.9	72	22.0	327
60세이상	7	1.6	83	19.3	145	33.6	153	35.5	43	10.0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	1.7	84	17.4	157	32.6	167	34.6	66	13.7	482
2천만원이상	8	2.9	54	19.6	78	28.3	87	31.5	49	17.8	276
계	16	2.1	138	18.2	235	31.0	254	33.5	115	15.2	758

- 역시 ‘매우 나빠졌다’는 인식은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2004년에 농업인들이 느끼는 5년 전 및 전년과 비교한 생활수준 인식은 2003년보다 전반적으로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년 대비보다는 5년 전 대비 생활수준 향상 인식 비율이 이상 2배에 달하였다.
- 농업인들은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을 5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94년 이후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현재의 생활수준을 5년전보다 향상되었다고(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합산) 응답한 비율은 '94년부터 '97년까지 40~6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UR 이후 농촌 투자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 이 같은 인식은 '98년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자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해 2002년에는 16.4%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다시 2003년에는 18.1%로 약간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20%대까지(20.3%)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표 2-2. 전년과 비교한 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n=759, 단위 :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		약간나빠짐		매우나빠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	-	32	9.8	117	35.7	139	42.4	40	12.2	328
60세이상	1	0.2	45	10.4	209	48.5	142	32.9	34	7.9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	-	50	10.4	215	44.5	176	36.4	42	8.7	483
2천만원이상	1	0.4	27	9.8	111	40.2	105	38.0	32	11.6	276
계	1	0.1	77	10.1	326	43.0	281	37.0	74	9.7	759

그림 2-1. 과거와 비교한 현재(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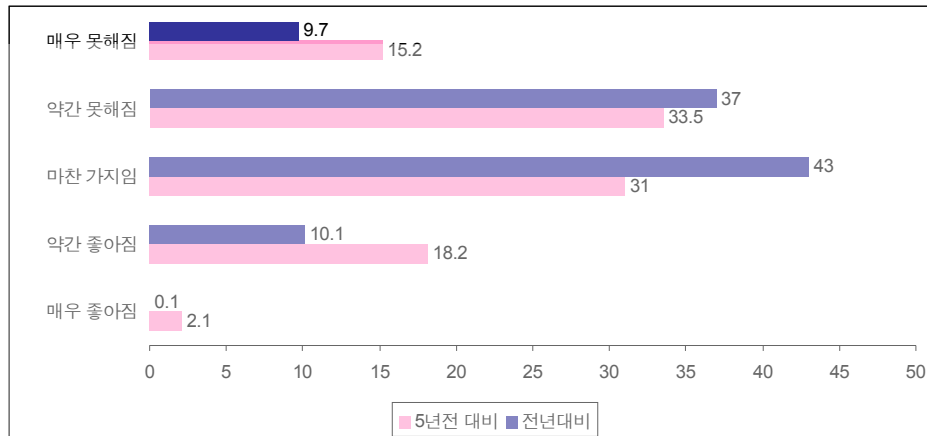


표 2-3.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4)

(단위: 명, %)

구분/년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좋아졌다	16(2.1)	1.3	1.4	2.9	1.4	2.9	3.9	6.4	7.8	7.4	8.0
약간 좋아졌다	138(18.2)	16.8	15.0	17.9	13.7	28.5	22.9	34.2	45.9	52.5	51.8
향상(소계)	154(20.3)	18.1	16.4	20.8	15.1	31.4	26.8	40.6	53.7	59.9	59.8
마찬가지이다	235(31.0)	32.4	33.4	30.6	31.6	36.8	26.7	28.1	30.8	29.6	28.9
약간 못해짐*	254(33.5)	29.5	29.6	29.0	27.7	22.7	30.5				
매우 나빠졌다	115(15.2)	20.1	20.6	19.6	25.6	9.1	16.0	31.1	15.5	10.5	11.3
합 계	758(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8년 조사 항목 신설(1994년~2004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1.2.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 수준 전망

-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7.8%로 전년(9.4%) 보다 1.6%p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도 67.8%로 전년(66.5%)보다 1.3%p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0세 미만과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2004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n=759, 단위: 명, %)

	현재보다살기좋은 것		현재와동일		현재보다악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26	7.9	79	24.1	223	68.0	328
60세이상	33	7.7	106	24.7	291	67.7	430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32	6.6	116	24.1	334	69.3	482
2천만원이상	27	9.8	69	25.0	180	65.2	276
계	59	7.8	185	24.4	514	67.8	758

1.3. 도시생활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인식

- 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비교에서는 ‘도시보다 살기 좋을 것’(0.9%), ‘도시만큼 살게 될 것’(6.5%) 등 긍정적인 응답은 7.4%에 그친 반면, ‘도시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10명 중 8명(81.1%)을 상회할 정도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 ‘도시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0세 미만의 계층에서, 2천만원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같은 계층 간의 인식은 전년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 농업인들의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WTO 체제가 출범한 '95년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이 29.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99년까지 20~30%대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 그러나 2000년 들어 갑자기 9.2%로 낮아진 이후 2001년 4.4%, 2002년에는 6.5%, 2003년 9.4%로 약간 상승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7.8%로 약간 줄면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 또한, 농촌과 도시 생활 격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5년 후 농촌의 생활이 도시와 비교해서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농업인은 0.9%에 그쳤다.

표 2-5. 도시와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n=759, 단위 : 명, %)

	도시보다살기좋다		도시만큼		도시보다어렵다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2	0.6	14	4.3	285	86.9	27	8.2	328
60세이상	5	1.2	35	8.1	330	76.7	60	14.0	430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6	1.2	35	7.2	385	79.7	57	11.8	483
2천만원이상	1	0.4	14	5.1	230	83.6	30	10.9	275
계	7	0.9	49	6.5	615	81.1	87	11.5	758

- 반면, 대다수인 81.1%는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비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 이후 약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6.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연도별 변화('95-'04)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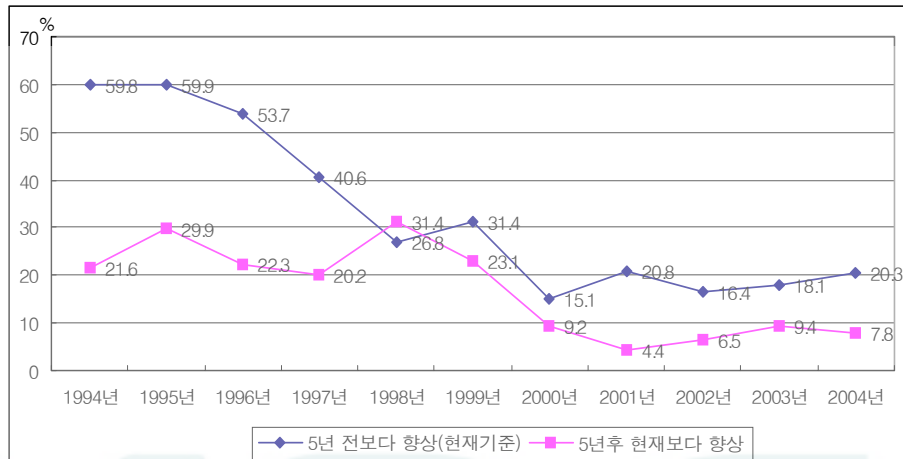
구분/년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현재보다 향상	59(7.8)	9.4	6.5	4.4	9.2	23.1	31.4	20.0	22.3	29.9
현재와 마찬가지로	185(24.4)	24.1	19.6	14.6	25.7	38.0	36.9	27.5	37.3	36.9
현재보다 낙후	514(67.8)	66.5	73.9	81.0	65.1	38.9	31.7	52.5	40.3	33.2
합 계	758(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995년~2004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1.4.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 대한 변화 추세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5년전과 비교한 평가 및 5년 후 기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UR 협상 타결 직후인 '94년 60%선에서 출발해 1998년 IMF 이전 30~5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20%선을 밀돌고 있다.
- 또,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는 IMF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0%선을 밀돌고 있다.
-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98년 IMF 이후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농업조수입의 낮은 성장률과 농업경영비의 빠른 증가가 농업소득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 농업인들은 농촌이라는 지역개념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살펴보고,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만족도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1.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는 응답 비율은 10.9%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불만(매우 불만 포함)’이라는 농업인 비율은 과반수에 가까운 48.8%로 나타났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3%p 낮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감소하였다.
- ‘만족한다’는 인식은 60세 미만 계층에서, 그리고 3ha 이상의 영농규모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만족도와 소득구조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n=759, 단위: 명,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4	1.2	40	12.2	104	31.7	109	33.2	71	21.6	328
60세이상	2	0.5	37	8.6	201	46.6	141	32.7	50	11.6	431
영농규모											
0.5ha미만	1	2.6	4	10.5	18	47.4	7	18.4	8	21.1	38
0.5~1ha미만	3	1.6	18	9.5	77	40.5	71	37.4	21	11.1	190
1.0~1.5ha미만	-	-	13	7.6	77	45.3	55	32.4	25	14.7	170
1.5~2ha미만	1	0.8	15	11.3	47	35.3	44	33.1	26	19.5	133
2~3ha미만	1	0.9	11	9.6	43	37.7	38	33.3	21	18.4	114
3ha이상	-	-	16	14.0	43	37.7	35	30.7	20	17.5	114
계	6	0.8	77	10.1	305	40.2	250	32.9	121	15.9	759

- 농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전체의 과반수에 가까웠는데, 이들은 그 요인으로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28.8%) 꼽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미흡’(22.8%),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1%), ‘주거 환경의 열악’(18.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상기한 4개의 생활환경기반 부족을 비슷한 비율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생활 환경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농촌 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n=759, 단위 : 명, %)

	주거환경의 열악		교육여건열악		복지시설미흡		일반인의 부정적인식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23	13.1	69	39.2	33	18.8	23	13.1	28	15.9	176
60세이상	45	23.9	36	19.1	50	26.6	50	26.6	7	3.7	188
영농규모											
0.5ha미만	3	21.4	3	21.4	2	14.3	3	21.4	3	21.4	14
0.5~1ha미만	20	21.7	24	26.1	25	27.2	19	20.7	4	4.3	92
1.0~1.5ha미만	16	20.3	17	21.5	23	29.1	17	21.5	6	7.6	79
1.5~2ha미만	16	23.5	21	30.9	13	19.1	12	17.6	6	8.8	68
2~3ha미만	5	8.8	20	35.1	11	19.3	15	26.3	6	10.5	57
3ha이상	8	14.8	20	37.0	9	16.7	7	13.0	10	18.5	54
계	68	18.7	105	28.8	83	22.8	73	20.1	35	9.6	364

2.2. 농업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 농업인들은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자는 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 포함)’는 응답은 40.1%로 역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도 7.7%p 감소하였다.
-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인식에서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집단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주 소득작목별로는 과수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99년 21.4%에서 2000년에는 12.6%로 절반가량 낮아졌다가 2001년에는 다시 9.9%로 떨어진 뒤 2002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7.6%를 보여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 그러나 2002년 최저 만족도를 보인 이후 2003년에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 2000년 수준을 상회하는 15.8%를 기록하였고, 다시 2004년도에는 20.5%로 집계됨으로써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으면서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0.1%)는 불만족 요인으로 ‘소득보장 미흡’을 가장 많이(40.8%) 꼽아 소득 불안정에 대한 불만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장래불안’(38.5%),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1.2%), ‘힘든 육체적 노동’(8.9%), ‘좋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0.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n=759, 단위 : 명,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16	4.9	59	18.0	106	32.4	111	33.9	35	10.7	327
60세이상	15	3.5	65	15.2	192	44.8	100	23.3	57	13.3	429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16	3.3	58	12.0	202	41.9	133	27.6	73	15.1	482
2천만원이상	15	5.5	66	24.1	96	35.0	78	28.5	19	6.9	274
계	31	4.1	124	16.4	298	39.4	211	27.9	92	12.2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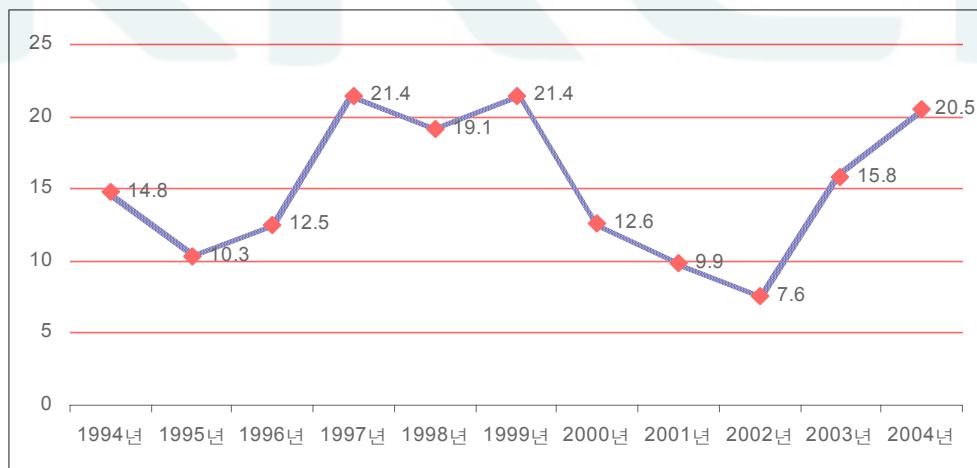
표 2-10.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명, ()는 %

구분/년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만족	31(4.1)	2.5	1.2	1.6	1.4	3.2	4.0	3.4	1.7	1.7	1.1
대체로 만족	124(16.4)	13.3	6.4	8.3	11.2	18.2	25.1	18.0	10.8	8.6	13.7
만족 소계	155(20.5)	15.8	7.6	9.9	12.6	21.4	19.1	21.4	12.5	10.3	14.8
그저 그렇다	298(39.4)	36.4	35.4	35.7	38.8	48.3	43.4	43.1	48.4	48.3	44.2
불만이다	211(27.9)	35.1	28.5	29.4	28.7	21.1	20.7	24.7	26.0	27.3	41.0
매우 불만*	92(12.2)	12.7	28.5	25.0	19.9	9.1	6.8	10.9	13.1	14.2	
합 계	756(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5년 신설항목.(1994년~2004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그림 2-3. 최근 10년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소득보장 미흡’을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계층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미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2천만원 미만 계층, 경작규모가 낮을수록 뚜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 소득 구조가 취약한 계층에서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래 불안’을 요인으로 꼽은 계층은 연령대는 역시 60세 미만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2천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농규모는 상대적으로 클수록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n=759, 단위: 명, %)

	소득보장 미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장래불안		일반인의 인식부족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66	45.2	6	4.1	14	9.6	58	39.7	1	0.7	1	0.7	146
60세이상	58	36.7	21	13.3	20	12.7	59	37.3	-	-	-	-	158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5	41.3	20	9.7	27	13.1	73	35.4	-	-	1	0.5	206
2천만원이상	39	39.8	7	7.1	7	7.1	44	44.9	1	1.0	-	-	98
계	124	40.8	27	8.9	34	11.2	117	38.5	1	0.3	1	0.3	304

2.3. 농사를 짓게 된 계기

- 농사에 종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조사 응답자중 73.4%인 555명이 ‘선친으로부터 농사승계’라고 대답해 대다수는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분가해서 농사 창업’이라는 응답이 18.5%, ‘비농업에서 귀농’이 6.2%,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에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2. 농사를 짓게 된 계기

(n=759, 단위: 명, %)

	선친으로부터 농사 승계		분가하여 농사 창업		비농업에서 귀농		기 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238	72.8	58	17.7	23	7.0	8	2.4	327
60세이상	317	73.9	82	19.1	24	5.6	6	1.4	429
계	555	73.4	140	18.5	47	6.2	14	1.9	756

2.4. 농업의 타직업과의 비교

- 농사에 종사하는 것이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6%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고 답하였으며, 5.7%는 ‘비슷하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2.4%는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답하였다.
- 다만, 응답자의 48.3%는 ‘본인하기에 달렸다’고 답해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응답자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작목별로는 과수농가와 수도작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3. 직업으로서 농업과 타 산업과의 비교

(n=759, 단위: 명, %)

	유리		비슷		불리		본인에따라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4	1.2	12	3.7	151	46.3	155	47.5	4	1.2	326
60세이상	8	1.9	31	7.2	170	39.4	211	49.0	11	2.6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	1.7	29	6.0	217	45.0	215	44.6	13	2.7	482
2천만원이상	4	1.5	14	5.1	104	37.8	151	54.9	2	0.7	275
계	12	1.6	43	5.7	321	42.4	366	48.3	15	2.0	757

2.5.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비교

- 농업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비교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매우 못산다’(18.8%), ‘못사는 편이다’(64.3%), ‘비슷하다’(14.1%), ‘잘사는 편이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농촌이 어렵다는 인식은 83.1%로 나타난 반면, 비슷하거나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은 16.9%로 나타나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생활 비교

(n=759, 단위: 명, %)

	매우 못산다		못사는 편		비슷하다		잘사는 편이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50	15.2	214	65.2	54	16.5	10	3.0	328
60세이상	93	21.6	274	63.6	53	12.3	11	2.6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109	22.6	309	64.0	55	11.4	10	2.1	483
2천만원이상	34	12.3	179	64.9	52	18.8	11	4.0	276
계	143	18.8	488	64.3	107	14.1	21	2.8	759

2.6.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의향 여부

-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다(반드시, 기회가 오면 합산)’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은 25.3%로 전년(29.6%)보다 4.3%p 감소했으며, ‘살고 싶지 않다(별로, 전혀 합산)’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은 63.2%로 전년(59.2%)보다 4.0%p

증가해 농촌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에서 살고 싶다’(반드시, 기회가 오면 합산)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6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2천만원 미만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5.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싶은 의향 여부

(n=759, 단위: 명, %)

	꼭살고싶다		기회가오면		아직모른다		별로살고싶지 않다		전혀살고싶지 않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6	1.8	93	28.4	32	9.8	161	49.2	35	10.7	327
60세이상	2	0.5	90	20.9	56	13.0	225	52.3	57	13.3	430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6	1.2	119	24.6	69	14.3	236	48.9	53	11.0	483
2천만원이상	2	0.7	64	23.4	19	6.9	150	54.7	39	14.2	274
계	8	1.1	183	24.2	88	11.6	386	51.0	92	12.2	757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이 같은 경영과 관련한 요인들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1.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

- 2004년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관심도는 DDA, FTA,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쌀 관세화 협상 등 최근 통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20% 대 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1994년 UR이 출범하던 해에 20.7%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농업인들의 개방에 따른 관심과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 최근 8년간 농업인의 관심사에서 수위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 변동’은 3년 전부터 관심 정도가 줄면서 지난해 18.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심도가 역전되었으나, 2004년 다시 25.2%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 이 밖에,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 분야인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은 양곡유통위원회가 최초로 수매가 인하안을 제시했던 2001년 25.4%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후 2002년에는 15.9%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다시 2003년에는 9.6%로 낮아졌다가 2004년에는 다시 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17.7%를 기록하였다.
- 반면, 농자재와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업 생산관련 관심도는 최근 수년간 2~4%대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를 연도별로 종합해 정리하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는 1994년 UR 출범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매년 4~5%씩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응답률 26.0%로, 다시 2004년에는 26.9%로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부상하면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였다.
-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한자리수를 유지해 오다가 2001년에는 25.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후 2002년에도 16%대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2003년에는 9.6%로 3년 만에 다시 한자리 수를 기록하였다가 2004년에 다시 17.7%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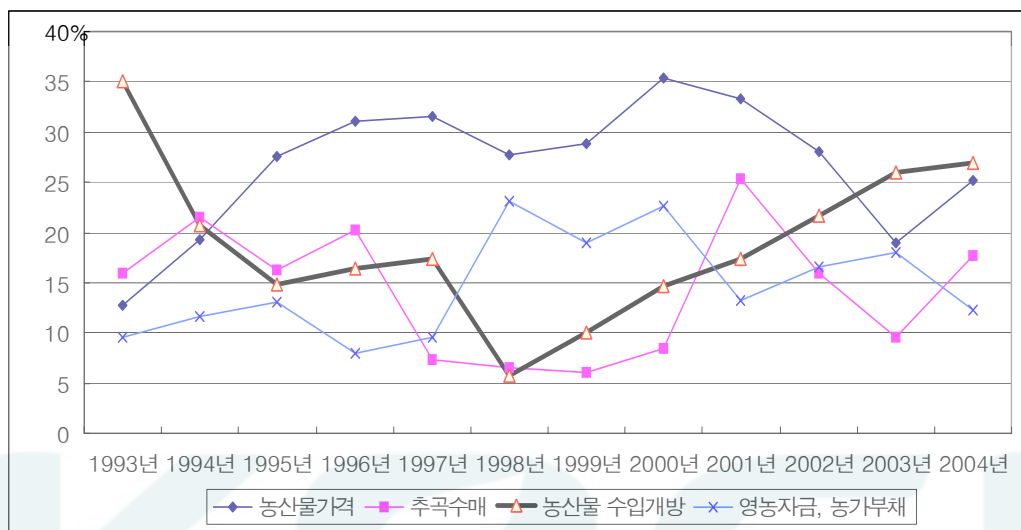
표 2-16.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복수 응답)

단위: 명, %

구분/년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농산물 가격 변동	382(25.2)	18.9	28.0	33.3	35.4	28.8	27.8	31.6	31.1	27.5	19.3
추곡수매	269(17.7)	9.6	15.9	25.4	8.5	6.1	6.6	7.3	20.2	16.2	21.5
영농자금·농가부채	186(12.3)	18.0	16.6	13.2	22.7	18.9	23.1	9.6	7.9	13.0	11.7
농산물 수입개방	407(26.9)	26.0	21.7	17.4	14.6	10.1	5.7	17.3	16.4	14.9	20.7
농촌지역개발	30(2.0)	1.7	1.3	1.3	2.2	3.3	3.7	15.0	4.8	6.1	6.4
농촌 인력	112(7.4)	7.3	6.4	3.0	4.3	6.7	4.0	16.2	9.2	9.6	8.1
농작물병충해, 기후	39(2.6)	14.3	7.2	4.0	8.6	19.2	20.4	2.5	3.1	7.3	6.0
농기계 등 농자재	38(2.5)	0.7	0.5	0.3	1.4	2.2	4.3	0.2	1.2	1.1	1.3
영농시설 현대화*	15(1.0)	0.7	0.2	0.4	0.3	1.9	1.4	0.1	2.0		
농지문제	37(2.4)	2.9	2.2	1.8	2.0	2.8	3.0	0.2	4.1	5.5	5.6
합 계	1,51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반영(1994년~2004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그림 2-4.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은 ‘98년 이후 여전히 두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부채 관련 정책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던 2001년에는 관심도가 약간 줄었다가 다시 2002년에는 전년보다 관심도가 약간 상승한 16.6%를 기록했으며, 2003년에는 18.0%의 응답률을 보였다가 2004년에는 12.3%로 약간 관심도가 낮아졌다.
-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농업인들의 관심 사항은 최근 수년간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쌀 관세화 협상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2.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변화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에서는 전년도 ‘농작물 병충해, 기상·기후 조건’(32.5%), ‘농촌 인력’(20.1%), ‘농산물 가격 불안정’(15.4%), ‘영농자금·농

가부채'(9.5%) 등의 순에서 2004년에는 '농촌인력 부족'(24.2%)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9%), '농산물 수입개방'(10.3%), '농작물 병충해와 기상·기후 조건'(10.1%) 등의 순으로 꼽았다.

-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농사에 애로 사항으로 꼽혀온 것은 최근 수년간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 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4년에는 '기상·기후조건', '95년에는 '농촌인력 문제', '96년과 '97년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98년과 '99년에는 '기상·기후 조건'이라고 응답하였다.
-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다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2002년에는 '수입개방'을 꼽았고, 2003년에는 다시 '기상·기후 조건'을 꼽았다가 2004년에는 '농촌인력 문제'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²⁾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대체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 수입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인력 부족 문제도 농업인들의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해 발표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조. 1993~2004

표 2-17.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복수 응답)

(n=1518, Frequency Missing =17)

구 분	빈 도(명)	비 율(%)	누적 빈도(명)	누적 비율(%)
농산물 가격	329	21.9	329	21.9
추곡수매	104	6.9	433	28.8
영농자금, 농가부채	149	9.9	582	38.8
농산물수입개방	155	10.3	737	49.1
농촌지역개발	32	2.1	769	51.2
농촌인력	363	24.2	1132	75.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151	10.1	1283	85.5
농자재	113	7.5	1396	93.0
영농시설 현대화	56	3.7	1452	96.7
농지문제	46	3.1	1498	99.8
기타	3	0.2	1501	100.0

3.4.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과 기대

- 2004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63.8%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53.7%)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10.1%p 증가하였으며, ‘올해와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도 34.3%에 달하였다.
- 반면에,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전망한 농업인은 1.9%에 그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천만원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2천만원 미만의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 소득작목별로는 노지채소와 과수농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8. 1년 후 농업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n=759, 단위: 명, %)

	올해보다 나아진다		올해와 동일		올해보다 어려워진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7	1.5	173	36.3	296	62.2	476
2천만원이상	7	2.5	85	30.8	184	66.7	276
주재배 작목							
수도작	4	1.0	135	35.4	242	63.5	381
과수	3	2.8	33	31.1	70	66.0	106
노지채소	-	-	15	28.8	37	71.2	52
축산	1	1.6	23	35.9	40	62.5	64
시설원예	5	6.2	25	30.9	51	63.0	81
특작	-	-	21	44.7	26	55.3	47
기타	1	4.8	6	28.6	14	66.7	21
계	14	1.9	258	34.3	480	63.8	752

제 3 장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어젠다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 개방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과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개방에 대응한 농업정책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농업개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1.1. 농산물 시장개방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인식

- WTO/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81.8%가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농업은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수출 증가로 농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은 0.7%에 그침으로써 농업인들의 개방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하였다.
- ‘농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은 영농규모 별로는 규모가 큰 농가계층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작목별로는 노지

채소와 과수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계층 간 차이에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10.7%에 그쳤는데, 이 같은 전망은 2천만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1.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인식

(n=759, 단위: 명, %)

	수출증가_농업발전		현 수준정도의 농업유지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농업 쇠퇴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4	0.8	55	11.4	381	79.0	42	8.7	482
2천만원이상	1	0.4	26	9.5	238	86.5	10	3.6	275
주재배 작목									
수도작	3	0.8	43	11.2	308	80.2	30	7.8	384
과수	1	0.9	9	8.4	91	85.0	6	5.6	107
노지채소	-	-	1	1.9	46	88.5	5	9.6	52
축산	1	1.6	7	10.9	52	81.3	4	6.3	64
시설원예	-	-	11	13.4	67	81.7	4	4.9	82
특작	-	-	7	14.9	39	83.0	1	2.1	47
기타	-	-	3	14.3	16	76.2	2	9.5	21
계	5	0.7	81	10.7	619	81.8	52	6.9	757

1.2.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한 인식

- 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농업인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농업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

다’는 응답이 55.5%로 반수를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농업개방 폭의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9.4%에 그쳐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밖에, 이 같은 개방 확대는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한 비율은 17.0%, 정부와 국민 관심정도에 따라 개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은 15.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로 집계되었다.
- ‘막을 수는 없지만 농업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를 계층별로 보면, 60세 미만이 60세 이상보다 높고,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2.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세계적인 대세		정부와 국민관심 정도_막을수 있다		막을수 없으나, 농업개방 폭의 조절 가능		막을수 없으며, 농업개방 폭의 조절 불가능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55	16.8	51	15.5	198	60.4	22	6.7	2	0.6	328
60세이상	74	17.2	66	15.3	223	51.7	49	11.4	19	4.4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1	16.8	83	17.2	251	52.0	49	10.1	19	3.9	483
2천만원이상	48	17.4	34	12.3	170	61.6	22	8.0	2	0.7	276
계	129	17.0	117	15.4	421	55.5	71	9.4	21	2.8	759

1.3. 농업 개방 진전에 따른 농가 대응

- 농업인들은 농업개방의 진전에 따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적절히 대처할 계획’(44.2%),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18.4%), ‘농외소득원 확보 등 대안 마련’(12.2%) 등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반해 응답자의 2.1%는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5%는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고 응답해 10명 중 2.5명 정도는 개방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를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적극 대응할 의사가 69.5%에서 74.8%로 5.3%p 증가하였고,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30.0%에서 24.6%로 5.4%p 감소함으로써 농업인의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2003년 4.9%에서 본 조사에서는 2.1%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개방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 정부의 대책마련과 지원정책 발표로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아무 대책이나 준비계획이 없다’는 농가는 대체로 경작규모가 큰 농가보다 작은 농가 계층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노지채소와 벼농사, 축산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 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시설원에 농가와 과수농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작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3. 농업개방 진전에 따른 농가 대응

(n=759, 단위: 명, %)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농외소득 확충 등의 대안 마련		전직을 위한 준비		적정히 대처할 계획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재배 작목													
수도작	49	12.8	34	8.9	6	1.6	187	49.0	102	26.7	4	1.0	382
과수	27	25.2	9	8.4	6	5.6	46	43.0	19	17.8	-	-	107
노지채소	10	19.2	7	13.5	-	-	21	40.4	14	26.9	-	-	52
축산	11	16.9	12	18.5	1	1.5	25	38.5	16	24.6	-	-	65
시설원예	27	32.9	12	14.6	1	1.2	31	37.8	11	13.4	-	-	82
특작	11	23.9	12	26.1	2	4.3	15	32.6	6	13.0	-	-	46
기타	4	19.0	6	28.6	-	-	9	42.9	2	9.5	-	-	21
계	139	18.4	92	12.2	16	2.1	334	44.2	170	22.5	4	0.5	755

2. 농업 개방과 관련한 농업정책 인식 및 요구

2.1. 농업 개방과 관련한 통상협상의 원칙에 대한 견해

- WTO/DDA 농업협상과 FTA 등 대외통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2.9%는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는 ‘다른 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26.6%),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16.6%), ‘잘 모르겠다’(4.0%) 등으로 나타났다.

-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농업개방과 관련한 통상협상의 원칙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농업개방은 최소화		다른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고려		잘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183	56.5	81	25.0	54	16.7	6	1.9	324
60세이상	213	50.1	118	27.8	70	16.5	24	5.6	425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248	52.2	134	28.2	70	14.7	23	4.8	475
2천만원이상	148	54.0	65	23.7	54	19.7	7	2.6	274
계	396	52.9	199	26.6	124	16.6	30	4.0	749

2.2.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제협상 대처 능력에 대한 견해

- 정부의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FTA 등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 대처 능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잘하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6.8%로 나타났고, ‘잘 못하고 있다’(매우 포함)는 인식이 과반수에 가까운 48.5%, ‘그저 그렇다’ 34.8%로 집계되어 정부의 국제협상 대처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였다.
-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2천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젊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제협상 대처능력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잘해 나아가고 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2	0.6	20	6.1	101	30.9	150	45.9	54	16.5	327
60세이상	6	1.4	99	23.0	163	37.8	140	32.5	23	5.3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6	1.2	92	19.0	180	37.3	166	34.4	39	8.1	483
2천만원이상	2	0.7	27	9.8	84	30.5	124	45.1	38	13.8	275
계	8	1.1	119	15.7	264	34.8	290	38.3	77	10.2	758

- 국제협상 대처능력에 부정적인 입장(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을 보인 응답자(전체의 48.5%)는 그 이유를,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57.1%) 꼽았다.
- 다음으로는 ‘상대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다’(21.6%), ‘공감대 형성 부족’(16.0%), ‘여론수렴의 미흡’(4.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제협상 대처에 대한 불만 요인

(n=759, 단위: 명, %)

	정부의 농업 보호 의지가 약하다		상대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다		여론수렴의 미흡		공감대 형성 부족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121	59.9	42	20.8	5	2.5	32	15.8	2	1.0	202
60세이상	83	53.5	35	22.6	11	7.1	25	16.1	1	0.6	155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113	56.8	37	18.6	13	6.5	35	17.6	1	0.5	199
2천만원이상	91	57.6	40	25.3	3	1.9	22	13.9	2	1.3	158
계	204	57.1	77	21.6	16	4.5	57	16.0	3	0.8	357

2.3.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한 견해

- 쌀 관세화 협상에서 농업인들은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³⁾ 반수가 넘는 농업인(51.2%)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실익이 우선’이라고 응답하였고, ‘관세화 유예의 무조건 관철’은 31.0%로 집계돼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 이 밖에,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한 농업인은 5.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2.0%로 나타났다.
- ‘관세화 유예의 무조건 관철’을 주장한 응답자는 6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소득은 2천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7.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관세화 유예의 무조건 관철		관세화로 시장 개방		관세화 유예 or 개방_실익 우선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117	35.9	26	8.0	161	49.4	22	6.7	326
60세이상	117	27.2	18	4.2	226	52.6	69	16.0	430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156	32.4	22	4.6	226	46.9	78	16.2	482
2천만원이상	78	28.5	22	8.0	161	58.8	13	4.7	274
계	234	31.0	44	5.8	387	51.2	91	12.0	756

3) 이 조사는 정부가 쌀 관세화 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최종 선택한 2004년 12월 말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협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2.4. 쌀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

-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에 가까운 농업인(45.0%)은 ‘농업농촌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였고, 다음으로는 ‘농업인과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38.6%), ‘쌀 산업만 피해를 볼 것’(12.4%) 등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피해는 없을 것’(1.5%), ‘쌀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2.2%) 등으로 쌀 시장 개방을 계기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였다.
- ‘농업인과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연령대는 6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2천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쌀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농업·농촌 전반의 침체		쌀산업만 피해		피해는 없을 것		쌀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		관련 주체의 대응에 따른 결과는 달라진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157	48.2	19	5.8	3	0.9	9	2.8	136	41.7	2	0.6	326
60세이상	184	42.7	75	17.4	8	1.9	8	1.9	156	36.2	-	-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214	44.4	76	15.8	9	1.9	9	1.9	174	36.1	-	-	482
2천만원이상	127	46.2	18	6.5	2	0.7	8	2.9	118	42.9	2	0.7	275
계	341	45.0	94	12.4	11	1.5	17	2.2	292	38.6	2	0.3	757

2.5. 쌀 협상 국내 대책에 대한 견해

-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한 국내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으며, ‘쌀 산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도 18.5%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48.2%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한 국내 쌀산업 대책에 대한 반응
(n=759, 단위: 명, %)

	적절한 조치 - 소득안정과 경쟁력 높일 것		실효성이 없는 임시방편		쌀산업을 오히려 악화		제도 운영에 따른 변동		잘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12	3.7	111	33.9	53	16.2	143	43.7	8	2.4	327
60세이상	21	4.9	114	26.5	87	20.2	186	43.2	23	5.3	431
주재배 작목											
수도작	18	4.7	104	27.0	79	20.5	170	44.2	14	3.6	385
과수	4	3.8	38	35.8	16	15.1	45	42.5	3	2.8	106
노지채소	1	1.9	22	42.3	9	17.3	15	28.8	5	9.6	52
축산	1	1.5	18	27.7	10	15.4	34	52.3	2	3.1	65
시설원예	2	2.4	28	34.1	17	20.7	32	39.0	3	3.7	82
특작	5	10.6	10	21.3	7	14.9	23	48.9	2	4.3	47
기타	2	9.5	5	23.8	2	9.5	10	47.6	2	9.5	21
계	33	4.4	225	29.7	140	18.5	329	43.4	31	4.1	758

- 반면,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조치로 소득 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 농업인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되었다.
-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주 소득원이 수도작인 농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작목 농가와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쌀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항목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응답 비율이 나타나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6. 쌀 협상에 따른 경작면적 조정 여부

- 쌀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경작면적 조정 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8%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 이 밖에,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머물렀고,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응답도 9.0%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였다.
-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6.0%)보다 벼농사를 부소득원으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3배 이상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는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3ha 이상의 경작규모를 소유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경작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 조정 의사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2002년도 조사에서는 2004년 쌀 재협상을 감안해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20.4%였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단계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12.5%로 7.9%p 감소함으로써 개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산업 조치 발표 등으로 경작면적을 크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쌀 협상 등 감안 2005년 벼 재배면적 조정 여부

(n=759, 단위: 명, %)

	축소할 계획		현 수준을 유지		확대할 계획		협상 결과에 따른 조정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영농규모											
0.5ha미만	3	7.9	26	68.4	2	5.3	5	13.2	2	5.3	38
0.5~1ha미만	25	13.4	138	73.8	1	0.5	13	7.0	10	5.3	187
1.0~1.5ha미만	22	13.3	118	71.1	2	1.2	18	10.8	6	3.6	166
1.5~2ha미만	17	12.9	100	75.8	1	0.8	11	8.3	3	2.3	132
2~3ha미만	14	12.7	73	66.4	6	5.5	14	12.7	3	2.7	110
3ha이상	12	11.0	78	71.6	11	10.1	6	5.5	2	1.8	109
계	93	12.5	533	71.8	23	3.1	67	9.0	26	3.5	742

2.7.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관련주체의 역할

-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 시키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농업인 10명 중 7명(70.1%)은 ‘정부’라고 응답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는,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을(19.8%) 꼽았고, 이 밖에는 ‘일반국민’(7.9%), ‘언론’(1.2%), ‘학계’(0.5%) ‘기타’(0.5%) 등으로 꼽았다.

-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계층에서, 학력과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뚜렷이 높았다. 반면, '농업인'이라는 응답은 60세 미만 계층에서, 학력과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높았다.

표 3-11.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인식

(n=759, 단위: 명, %)

	농업인		정부		일반국민		학계		언론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86	26.5	205	63.1	25	7.7	1	0.3	6	1.8	2	0.6	325
60세이상	62	14.6	320	75.5	34	8.0	3	0.7	3	0.7	2	0.5	424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1	16.9	350	73.1	42	8.8	3	0.6	1	0.2	2	0.4	479
2천만원이상	67	24.8	175	64.8	17	6.3	1	0.4	8	3.0	2	0.7	270
계	148	19.8	525	70.1	59	7.9	4	0.5	9	1.2	4	0.5	749

-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 시키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역시 '정부'라는 응답이 74.9%로 중요성 인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농업인'이라는 응답은 중요성 인식에 비해 낮은 비율인 8.7%로 나타나 역할 인식은 중요성 인식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반면,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11.8%)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반국민'(납세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한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12.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평가

(n=759, 단위: 명, %)

	농업인		정부		일반국민		학계		언론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26	8.0	238	73.5	36	11.1	5	1.5	16	4.9	3	0.9	324
60세이상	39	9.2	321	76.1	52	12.3	6	1.4	4	0.9	-	-	422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48	10.1	352	74.1	57	12.0	6	1.3	9	1.9	3	0.6	475
2천만원이상	17	6.3	207	76.4	31	11.4	5	1.8	11	4.1	-	-	271
계	65	8.7	559	74.9	88	11.8	11	1.5	20	2.7	3	0.4	746

2.8.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7%가 ‘고품질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를 꼽아 품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3.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n=759, 단위: 명, %)

	가격경쟁력제고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화		브랜드화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51	15.7	49	15.1	152	46.8	68	20.9	5	1.5	325
60세이상	126	29.6	37	8.7	206	48.4	51	12.0	6	1.4	426
주재배 작목											
수도작	91	23.9	55	14.5	181	47.6	47	12.4	6	1.6	380
과수	37	34.9	10	9.4	39	36.8	19	17.9	1	0.9	106
노지채소	15	29.4	6	11.8	22	43.1	7	13.7	1	2.0	51
축산	12	18.5	7	10.8	30	46.2	14	21.5	2	3.1	65
시설원예	13	15.9	4	4.9	44	53.7	21	25.6	-	-	82
특작	7	14.9	-	-	33	70.2	6	12.8	1	2.1	47
기타	2	10.0	4	20.0	9	45.0	5	25.0	-	-	20
계	177	23.6	86	11.5	358	47.7	119	15.8	11	1.5	751

- 다음으로는,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23.6%),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15.8%), ‘경영규모 확대’(1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 재배작목 별로는,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응답 비율은 과수 농가가 가장 높았고, ‘경영규모 확대’는 수도작 농가가, ‘고품질화’는 특작 농가가, ‘브랜드화’는 시설원예 농가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KREI

제 4 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

- 참여정부 출범 2년째 주요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제시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와 견해, 그리고 향후 농정 추진 방향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았다.

1. 참여정부 농정 2년의 평가와 기대

1.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참여정부 출범 2년째인 2004년 한 해 동안 시행했던 주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농업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대체로 합산)은 7.7%로 전년(6.6%)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불만족(매우, 대체로 합산)’이라는 응답은 52.5%로 전년(57.9%)에 비해 5.4%p 감소해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농업인은 39.8%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인식은 연령대로 차이를 보여 긍정적인(만족) 평가에서 60세 미만은 3.1%, 60세 이상은 11.3%를 기록하였고, 부정적인(불만) 인식에서

도 60세 미만은 61.8%를, 60세 이상은 45.5%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뚜렷하였다.

- 작목별로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과수 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특작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민의 정부’등 지난 정부에 비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높은 편(매우 높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7.5%, 낮은 편(매우 낮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47.7%로 과반수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참여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난 정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농업정책 1년 전반에 대한 평가

(n=759, 단위: 명, %)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1	0.3	9	2.8	115	35.2	135	41.3	67	20.5	327
60세이상	2	0.5	46	10.8	185	43.3	157	36.8	37	8.7	427
주재배 작목											
수도작	1	0.3	33	8.7	143	37.5	155	40.7	49	12.9	381
과수	1	0.9	8	7.5	37	34.6	45	42.1	16	15.0	107
노지채소	1	1.9	.	.	27	51.9	16	30.8	8	15.4	52
축산	-	-	7	10.8	24	36.9	23	35.4	11	16.9	65
시설원예	-	-	2	2.5	33	40.7	35	43.2	11	13.6	81
특작	-	-	3	6.4	25	53.2	14	29.8	5	10.6	47
기타	-	-	2	9.5	11	52.4	4	19.0	4	19.0	21
계	3	0.4	55	7.3	300	39.8	292	38.7	104	13.8	754

- 과반수에 가까운(44.8%) 농업인들은 ‘그저 그렇다’고 비교 평가를 유보하였다.
-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로는 6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작목별로는 과수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 참여정부와 지난 정부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비교

(n=759, 단위: 명, %)

	매우 높다		높은 편		그저그렇다		낮은 편		매우 낮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2	0.6	15	4.6	137	42.0	125	38.3	47	14.4	326
60세이상	-	-	39	9.2	200	46.9	142	33.3	45	10.6	426
주재배 작목											
수도작	2	0.5	29	7.6	165	43.2	134	35.1	52	13.6	382
과수	-	-	6	5.7	47	44.3	42	39.6	11	10.4	106
노지채소	-	-	.	.	26	51.0	18	35.3	7	13.7	51
축산	-	-	7	10.8	27	41.5	20	30.8	11	16.9	65
시설원예	-	-	5	6.2	41	50.6	30	37.0	5	6.2	81
특작	-	-	5	10.9	21	45.7	17	37.0	3	6.5	46
기타	-	-	2	9.5	10	47.6	6	28.6	3	14.3	21
계	2	0.3	54	7.2	337	44.8	267	35.5	92	12.2	752

1.2. 국제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대책 평가

- 정부가 WTO/DDA, FTA, 쌀 관세화 협상 등에 따라 농업개방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추진한 쌀산업 정책, 농지제도 개선, 협동조합 개혁, 농가소

득 안정망 마련 등 농업대책 전반에 대해 농업인들은 18.2%가 ‘잘하고 있다(매우, 비교적 합산)’고 응답하였고, 39.5%는 ‘잘 못하고 있다(매우 포함)’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의 2배에 달했다.

- ‘잘하고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계층 간 분포는,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3. 국제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n=759, 단위: 명, %)

	매우 잘해 나아가고 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저그렇다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4	1.2	31	9.6	129	39.8	129	39.8	31	9.6	324
60세이상	3	0.7	99	23.2	188	44.0	113	26.5	24	5.6	427
영농규모											
0.5ha미만	3	8.1	7	18.9	20	54.1	6	16.2	1	2.7	37
0.5~1ha미만	-	-	38	20.1	92	48.7	49	25.9	10	5.3	189
1.0~1.5ha미만	2	1.2	37	21.8	65	38.2	58	34.1	8	4.7	170
1.5~2ha미만	2	1.5	18	13.6	51	38.6	50	37.9	11	8.3	132
2~3ha미만	-	-	23	20.4	50	44.2	30	26.5	10	8.8	113
3ha이상	-	-	7	6.4	39	35.5	49	44.5	15	13.6	110
계	7	0.9	130	17.3	317	42.2	242	32.2	55	7.3	751

1.3. 정부의 역점추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 ‘농지제도 개선’(16.2%),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14.6%)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축

산업 등록제와 낙농산업 현안해결'(5.7%), '한-칠레 FTA 후속대책 마련'(5.0%), 'WTO/DDA 농업협상'(1.7%)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표 4-4. 농업정책 중 가장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

(n=1518, Frequency Missing =261)

구 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빈도(명)	누적 비율(%)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	183	14.6	183	14.6
농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391	31.1	574	45.7
농지제도 개선	204	16.2	778	61.9
축산업 등록제와 낙농산업 현안 해결	72	5.7	850	67.6
한칠레 FTA 후속대책 마련	63	5.0	913	72.6
WTO DDA 농업협상	22	1.7	935	74.4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315	25.1	1250	99.4
기타	7	0.6	1257	100.0

1.4.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정에 대한 견해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농업여건 변화 정책 반영'(14.9%),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 '농촌 생활 개선과 복지대책 강화'(10.2%), '농업 기반시설 확충 투융자 확대'(9.1%),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8.3%),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한 투융자 확대'(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n=1518, Frequency Missing =17)

구 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빈도(명)	누적 비율(%)
농업 여건 변화 정책 반영	224	14.9	224	14.9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265	17.7	489	32.6
농업 기반시설 확충 투융자 확대	137	9.1	626	41.7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한 투융자 확대	107	7.1	733	48.8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	289	19.3	1,022	68.1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124	8.3	1,146	76.3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200	13.3	1,346	89.7
농촌 생활 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153	10.2	1,499	99.9
기타	2	0.1	1,501	100.0

2.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2.1.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한 견해

- 2004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 정부가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업인들은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포함)이 21.0%로 나타났고, ‘불만족’(매우 포함)은 34.5%로 나타나 불만족 응답이 13.5%p 높게 나타나는 등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을 제외하고 불만족 응답이 약간 높았다.

4) 정부는 2004년 11월 11일 농가의 최근 실질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17만원/80kg) 설정하고, 목표가격의 98% 수준(쌀값 5% 하락 가정)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 계층별로는, 벼농사를 주 재배작목으로 하는 농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포함) 23.4%로 평균을 상회했으며, 불만족 응답(매우 포함)도 38.9%로 평균을 상회해 불만족 응답 비율이 15.5%p 높아 직접 수혜자인 벼농가의 의견을 불만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표 4-6.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주재배 작목											
수도작	15	3.9	75	19.5	145	37.8	125	32.6	24	6.3	384
과수	2	2.0	20	19.8	56	55.4	21	20.8	2	2.0	101
노지채소	-	-	11	25.0	24	54.5	7	15.9	2	4.5	44
축산	1	1.6	8	12.5	37	57.8	14	21.9	4	6.3	64
시설원예	-	-	14	17.3	35	43.2	28	34.6	4	4.9	81
특작	-	-	7	14.9	23	48.9	14	29.8	3	6.4	47
기타	-	-	3	14.3	10	47.6	7	33.3	1	4.8	21
계	18	2.4	138	18.6	330	44.5	216	29.1	40	5.4	742

-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농업인들은 불만족 요인으로,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 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으로 나타났다.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은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계층에서 가장 높게(33.8%) 나타나 수도작 농가의 우려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방안 불만족 요인

(n=759, 단위: 명, %)

	낮은 목표가격- 농가소득하락 보전못해		낮은 고정형 직불금액 수준		장기성이 없는 보장 조치		수확기 홍수 출하 막지 못할 것		지역별 소득 불균형 초래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재배 작목													
수도작	38	25.7	29	19.6	26	17.6	50	33.8	5	3.4	-	-	148
과수	7	30.4	5	21.7	6	26.1	5	21.7	-	-	-	-	23
노지채소	1	11.1	3	33.3	2	22.2	2	22.2	1	11.1	-	-	9
축산	7	38.9	2	11.1	4	22.2	4	22.2	1	5.6	-	-	18
시설원예	8	25.0	5	15.6	8	25.0	9	28.1	2	6.3	-	-	32
특작	5	29.4	1	5.9	2	11.8	5	29.4	2	11.8	2	11.8	17
기타	-	-	1	12.5	3	37.5	2	25.0	2	25.0	-	-	8
계	66	25.9	46	18.0	51	20.0	77	30.2	13	5.1	2	0.8	255

- 향후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영농규모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의향을 묻은 결과, ‘현 경작규모와 작부체계 유지’(42.7%), ‘경작규모 유지, 작부체계 변경’(33.3%), ‘영농규모 축소’(12.0%), ‘영농규모 확대’(5.6%), ‘잘 모르겠다’(6.3%) 등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의견은 특히 주 소득원을 벼농사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영농규모와 작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과 오히려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작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벼농가 계층에서 벼 재배 농가소득보전직불제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시 경작면적 조정 여부
(n=759, 단위: 명, %)

	영농규모 축소		현 경작규모 유지, 작부 체계도 유지		현 경작규모 유지하되, 작부 체계는 변경		영농규모 확대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재배 작목											
수도작	35	9.6	180	49.6	111	30.6	25	6.9	12	3.3	363
과수	19	19.8	33	34.4	29	30.2	3	3.1	12	12.5	96
노지채소	4	10.5	16	42.1	12	31.6	3	7.9	3	7.9	38
축산	7	11.1	25	39.7	20	31.7	3	4.8	8	12.7	63
시설원예	8	10.3	26	33.3	37	47.4	4	5.1	3	3.8	78
특작	9	20.5	15	34.1	18	40.9	1	2.3	1	2.3	44
기타	3	15.0	5	25.0	7	35.0	-	-	5	25.0	20
계	85	12.1	300	42.7	234	33.3	39	5.6	44	6.3	702

2.2. 양곡관리법 개정 등 양정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⁵⁾ 추진에 대해,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은 개정 필요성(매우 포함)에 대해 동의하였고, 24.7%는 불필요(매우 포함)하다고 응답하였다.
-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은 1ha 미만의 영세농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 소득작목별로는 수도작 계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5)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쌀시장 개방 협상과 DDA 협상에 대비해 추곡수매 중심의 쌀산업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표 4-9.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필요		필요		그저그렇다		불필요		매우 불필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영농규모											
0.5ha미만	2	5.4	13	35.1	20	54.1	2	5.4	-	-	37
0.5~1ha미만	27	14.7	65	35.3	65	35.3	23	12.5	4	2.2	184
1.0~1.5ha미만	17	10.4	51	31.3	57	35.0	32	19.6	6	3.7	163
1.5~2ha미만	8	6.3	41	32.3	37	29.1	29	22.8	12	9.4	127
2~3ha미만	9	8.3	36	33.0	33	30.3	25	22.9	6	5.5	109
3ha이상	6	5.5	22	20.0	41	37.3	31	28.2	10	9.1	110
계	69	9.5	228	31.2	253	34.7	142	19.5	38	5.2	730

- 양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38.4%는 ‘그저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하였다.
- 양정제도 개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계층은 영농규모가 큰 농가 계층과, 수도권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양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적절		적절한 편		그저그렇다		부적절		매우 부적절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영농규모											
0.5ha미만	1	2.6	15	39.5	18	47.4	4	10.5	-	-	38
0.5~1ha미만	6	3.3	59	32.1	79	42.9	36	19.6	4	2.2	184
1.0~1.5ha미만	5	3.0	38	23.2	66	40.2	48	29.3	7	4.3	164
1.5~2ha미만	1	0.8	39	30.7	39	30.7	37	29.1	11	8.7	127
2~3ha미만	4	3.6	26	23.4	47	42.3	27	24.3	7	6.3	111
3ha이상	1	0.9	20	18.2	33	30.0	46	41.8	10	9.1	110
계	18	2.5	197	26.8	282	38.4	198	27.0	39	5.3	734

- 양정제도 개편 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해야 한다고 응답해 도입 시기는 늦춰지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당장 도입’(27.2%), ‘잘 모르겠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공공비축제 도입 시기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내년부터 당장 도입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영농규모							
0.5ha미만	1	6.7	13	86.7	1	6.7	15
0.5~1ha미만	22	33.3	41	62.1	3	4.5	66
1.0~1.5ha미만	10	22.2	34	75.6	1	2.2	45
1.5~2ha미만	13	31.7	28	68.3	-	-	41
2~3ha미만	5	17.2	23	79.3	1	3.4	29
3ha이상	8	38.1	13	61.9	-	-	21
계	59	27.2	152	70.0	6	2.8	217

3. 농지법 개정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견해

3.1.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⁶⁾과 관련, 농업인들은 필요성에 대

6)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와 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 62.4%는 ‘필요하다’(매우 포함)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 ‘필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지대별로는 평야지대 농업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영농규모별로는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도시근교 농업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영농규모 별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2.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필요		필요		그저그렇다		불필요		매우 불필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지대별 형태											
평야지대	29	16.7	87	50.0	26	14.9	19	10.9	13	7.5	174
산간지대	27	17.1	65	41.1	38	24.1	22	13.9	6	3.8	158
준산간지대	70	20.3	145	42.0	61	17.7	49	14.2	20	5.8	345
도시근교	13	19.4	28	41.8	15	22.4	10	14.9	1	1.5	67
영농규모											
0.5ha미만	7	18.4	18	47.4	9	23.7	4	10.5	-	-	38
0.5~1ha미만	37	19.8	89	47.6	30	16.0	21	11.2	10	5.3	187
1.0~1.5ha미만	28	17.0	78	47.3	32	19.4	18	10.9	9	5.5	165
1.5~2ha미만	29	22.5	53	41.1	20	15.5	21	16.3	6	4.7	129
2~3ha미만	18	15.8	53	46.5	22	19.3	19	16.7	2	1.8	114
3ha이상	20	18.0	34	30.6	27	24.3	17	15.3	13	11.7	111
계	139	18.7	325	43.7	140	18.8	100	13.4	40	5.4	744

-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9.0%, ‘잘 모른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정도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매우적절’(13.4%), ‘적절한 편’(49.7%) 등 전체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2.2%에 그쳐 긍정적인 견해가 뚜렷하였다.
-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 비율은 준산간지대 농업인 계층과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매우 적절		적절한 편		그저그렇다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지대별 형태											
평야지대	11	11.8	47	50.5	13	14.0	12	12.9	10	10.8	93
산간지대	15	20.8	29	40.3	15	20.8	7	9.7	6	8.3	72
준산간지대	21	11.9	94	53.4	19	10.8	33	18.8	9	5.1	176
도시근교	4	9.8	20	48.8	9	22.0	7	17.1	1	2.4	41
영농규모											
0.5ha미만	2	14.3	10	71.4	1	7.1	-	-	1	7.1	14
0.5~1ha미만	14	14.6	51	53.1	12	12.5	13	13.5	6	6.3	96
1.0~1.5ha미만	10	14.9	35	52.2	8	11.9	10	14.9	4	6.0	67
1.5~2ha미만	11	14.9	34	45.9	11	14.9	11	14.9	7	9.5	74
2~3ha미만	3	5.6	32	59.3	9	16.7	8	14.8	2	3.7	54
3ha이상	11	14.3	28	36.4	15	19.5	17	22.1	6	7.8	77
계	51	13.4	190	49.7	56	14.7	59	15.4	26	6.8	382

-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기대 효과를, ‘농촌 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28.8%), ‘농지 구조조정 촉진’(15.7%), ‘농정환경 변화 능동 대처’(1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촌지역 활력증진’에 대한 기대는 지대별로는 산간지역 농업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영농규모별로는 0.5ha 미만의 소농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 농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

(n=759, 단위: 명, %)

	농정환경 변화_능동적 대처		농지 구조조정 촉진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농촌지역 활력 증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지대별 형태									
평야지대	7	9.6	17	23.3	20	27.4	29	39.7	73
산간지대	10	15.6	6	9.4	15	23.4	33	51.6	64
준산간지대	18	12.5	24	16.7	41	28.5	61	42.4	144
도시근교	4	12.9	2	6.5	14	45.2	11	35.5	31
영농규모									
0.5ha미만	1	6.3	3	18.8	4	25.0	8	50.0	16
0.5~1ha미만	9	10.1	13	14.6	32	36.0	35	39.3	89
1.0~1.5ha미만	9	14.3	7	11.1	17	27.0	30	47.6	63
1.5~2ha미만	8	14.8	9	16.7	17	31.5	20	37.0	54
2~3ha미만	5	11.1	8	17.8	13	28.9	19	42.2	45
3ha이상	7	15.6	9	20.0	7	15.6	22	48.9	45
계	39	12.5	49	15.7	90	28.8	134	42.9	312

- 한편,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다’와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도시인에게만 간다’는 의견도 각 20.5%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우량 농지의 잠식’(18.2%), ‘국토의 난개발’(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농지법 개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n=759, 단위: 명, %)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다		도시민들의 농촌투기 극심		국토의 난개발 급증		우량농지의 잠식 급증		개발이익이 도시민에게만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대별 형태													
평야지대	10	27.0	10	27.0	6	16.2	3	8.1	6	16.2	2	5.4	37
산간지대	4	15.4	7	26.9	2	7.7	4	15.4	6	23.1	3	11.5	26
준산간지대	12	21.1	14	24.6	2	3.5	16	28.1	13	22.8	-	-	57
도시근교	1	8.3	4	33.3	3	25.0	1	8.3	2	16.7	1	8.3	12
영농규모													
0.5ha미만	-	-	2	50.0	-	-	1	25.0	1	25.0	-	-	4
0.5~1ha미만	7	20.6	10	29.4	5	14.7	5	14.7	4	11.8	3	8.8	34
1.0~1.5ha미만	3	11.5	8	30.8	2	7.7	2	7.7	11	42.3	-	-	26
1.5~2ha미만	8	29.6	6	22.2	2	7.4	6	22.2	3	11.1	2	7.4	27
2~3ha미만	2	11.8	3	17.6	3	17.6	5	29.4	3	17.6	1	5.9	17
3ha이상	7	29.2	6	25.0	1	4.2	5	20.8	5	20.8	-	-	24
계	27	20.5	35	26.5	13	9.8	24	18.2	27	20.5	6	4.5	132

3.2.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견해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잘 진행되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33.7%로 집계되었으며, ‘아니다’(전혀 포함)는 응답도 이와 유사한 34.4%로 나타나 아직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는 60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소득은 낮은 계층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집단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16. 협동조합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n=759,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그런편		그저그렇다		아닌편		전혀아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6	1.8	63	19.3	91	27.9	100	30.7	66	20.2	326
60세이상	21	5.0	163	38.4	148	34.9	70	16.5	22	5.2	424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22	4.6	157	33.0	165	34.7	92	19.3	40	8.4	476
2천만원이상	5	1.8	69	25.2	74	27.0	78	28.5	48	17.5	274
계	27	3.6	226	30.1	239	31.9	170	22.7	88	11.7	750

-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30.6%),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역할 변화’(21.0%) 순으로 꼽아 농업인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합 임직원의 보수 문제와 역할 변화를 주문한 계층은 6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한 계층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협동조합 개혁 주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응답이 반수를 넘었으며(60.9%), 다음으로는 ‘정부’(14.4%), ‘농민단체’(13.8%), ‘협동조합 임직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

(n=759, 단위 : 명, %)

	중앙회 조직 및 인력과 보수 문제		역할변화 (신용, 경제사업 분리)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60세미만	161	49.8	81	25.1	74	22.9	7	2.2	323
60세이상	188	44.4	76	18.0	154	36.4	5	1.2	423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210	44.5	94	19.9	161	34.1	7	1.5	472
2천만원이상	139	50.7	63	23.0	67	24.5	5	1.8	274
계	349	46.8	157	21.0	228	30.6	12	1.6	746

- 협동조합 개혁은 조합원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농민단체’라는 의견은 젊은 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8. 협동조합 개혁주체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명,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		정부		농민단체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40	12.5	188	58.6	43	13.4	50	15.6	-	-	321
60세이상	39	9.4	259	62.7	63	15.3	51	12.3	1	0.2	413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45	9.8	283	61.4	62	13.4	70	15.2	1	0.2	461
2천만원이상	34	12.5	164	60.1	44	16.1	31	11.4	-	-	273
계	79	10.8	447	60.9	106	14.4	101	13.8	1	0.1	734

제 5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 구조화된 조사문항 이외에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해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의견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제기되었으며, 각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1.1. 개황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농업인들의 농업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 중 분야별로 정리된 의견은 총 250건으로 전년보다 23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 66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업 관련 기관, 특히 농협 개혁에 대한 건의가 38건으로 25건이나 증가하면서 농협개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 쌀 협상과 쌀산업 구조조정 대책 등의 발표로 추곡수매 등 쌀산업과 관련한 의견도 지난해보다 16건이 늘어난 36건이 제시되었다. 반면, 지난

해 담보 상태를 보였거나 농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었던 DDA/FTA 등 농업개방과 관련한 의견은 10건이 줄어든 16건이 제시되었다.

- 제시된 의견 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의 농정을 요구하였고, 수매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았다. 또 농지구제 완화는 대체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우려하였고, 농업관련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협의 개혁을 요구한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 밖에, 농업개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농업의 피해에 대해 이득을 보는 산업 측면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농촌의 후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요망하기도 하였다. 또, 농촌 노인의 복지와 노후 대책도 다수가 요구하였다.

1.2. 농업인의 농정건의 요지

분 야	건수	요 지
농업정책 전반	66	정부의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정책의 일관성, 종합대책 차질없는 추진,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정책에 농민의견 반영
농업관련기관 개혁	38	농협개혁 정부 주도, 부실조합 합병, 농협 임직원 연봉 조정, 농협경제사업 강화, 신경분리, 농협중앙회 구조조정, 지역 농협 활성화
추곡수매 등 쌀산업	36	수매제 폐지 반대, 수매제 폐지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쌀 생산기반 유지, 쌀 가격 보장, 소득보전 직불금 상향조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19	가격 안정 대책, 수입 농산물 유통 단속, 가격예시제 도입, 유통개혁
농지구제 완화	17	농지은행 설립, 농지법 개정, 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우려,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DDA/FTA 농산물 협상	16	공산품 수출 이익금 농촌 환원해야, 식량안보 차원 고려돼야,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소외, 단계적인 개발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
영농자재 수급	16	농기계 구입 보조, 농약가격 표시제, 제초제 무상 공급, 면세유 확대
농촌일손, 후계인력	13	젊은인력 농촌 유인책 필요, 농촌지도사업 강화, 농민후계자 육성
농촌지역개발, 복지	9	농촌 노인 노후대책, 농촌 노인 복지 확충, 자녀 교육, 환경 개선
영농자금, 농가부채	6	상호금융자금 무이자로 전환, 전업농 지원금 대상 제한 완화, 농가부채 탕감 정책 지양, 장기 저리자금 지원 확대
영농환경 개선	5	경지정리와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현대화, 하천정비
기타	9	농가소득 안정망, 농정현안 조사 실시, 산림 자원화 등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2.1. 농업정책 전반

-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농민 스스로 노력과 인내로 농업을 해야 한다.
- 졸속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농업, 농촌이 더욱 황폐화하고 있다.
- 우리 모두가 농업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기획예산처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민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
-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농업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농촌은 정부의 대책 지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 농민들이 만족하고 희망과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여건을 만든다면 하나의 산업으로 나름대로 성장해 갈 것이다.
- 농업인에게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농촌이 활기차고 도시근로자들이 귀농을 희망하도록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융자 정책을 실행하고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과계 고등학교와 농과계대학에 대한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의 일괄된 정책 수립을 바라며 농촌복지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 정부와 학계 언론들이 농업인의 고통을 잘 관찰했으면 한다.
-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앞을 보는 각도를 가지고 대처방안을 준비 해 주기 바란다.
- 순수 농업부산물과 산야초로 소를 키우는 농가에 환경보전 수당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 과감한 정부의 투자만이 농촌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실태이다.
- 정부에서 농촌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생존과 현실을 알고 하겠지만 실제 농민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정부가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 쌀 협상과 관련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 농업정책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것으로 안정된 정책이 되어야 한다.
-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식량무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 농업은 곧 국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생명산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직접지불제 ha당 지원 가격 인상, 직접지불제 상한 면적 제한 폐지, 농자재와 유류에 대한 부가세 및 면세 정책 유지를 바란다.
- 농업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신뢰하기 어렵고 모든 지원 정책이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금이 적은 지자체 농민만 곤란을 당한다.
- 소농의 농민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 정부의 농업 정책을 신뢰 할 수 없다.
- 농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소비자들의 의식개혁으로 농민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치고 고령화된 농촌의 복지에도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 모든 농정이 실제 농민의 손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농업정책에 농민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정부의 농업정책이 너무나 농업인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 영세농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 농민을 위한 농정, 노령 농민 대책이 필요하다.
-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및 생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정부는 우리 농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바란다.
- 농업정책이 예나 지금이나 뚜렷한 변화가 없다. 농민을 눈 가리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앞날에 농업이 희망이 없다고 본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본다.

- 소비자의 생각이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 정부의 농촌 농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한국 농촌을 재건설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 정부는 지금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길 바라며 여야가 하나되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여 농촌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길 바란다.
- 현재 농촌에 대농가는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지만 소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농촌도 바야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농업경영인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농촌에도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
- 농촌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업정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땅을 지킬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
- 농촌이 잘 살 수 있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었으면 한다.
- 농업의 개방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농민들 스스로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
- 정부의 농촌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이 세워져서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생활에 전념해 볼 의욕을 갖도록 했으면 한다.
- 중국과 일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국의 농산물 시세 및 향후 예상가격, 수량 등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 또는 농업에 애착을 갖고 정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 농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교육, 언론, 정부, 국민 모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혁신적이어야 한다.
- 농업인은 누구나 일관된 농정을 원하고 있다.

- 정부에서 토지 대금 대주고 농사지은 벼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대해 농민으로써 회의를 느낀다.
- 밭농사만 짓고 있는 농가에도 논농사 짓는 농가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농업정책 말로만 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도록 해 주기 바란다.
- 평생을 땅과 생활해 온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농촌도 잘 살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실패한 농정은 개혁해야 한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p.c온실은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 정부가 농업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농민 스스로도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농업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정부나 국회의원 기타 공무원들이 농업에 대하여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 정책 입안자들이 먼 앞날을 생각해서 백년 후에도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 정부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정책을 제시하여 신뢰받고 책임질 수 있는 농정이 되었으면 한다.
- 정부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참여 정부의 여당은 농업정책 전문가가 적고 국제적인 대응책이 약하며 농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 농촌에 정부에서 119조원을 투입해도 농촌으로 와서 정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득이 적으니까.
-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
-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대외 협상력이 모자라는 느낌이다. 농업정책 수립을 장기간을 생각해서 국민에게도 정보 공개를 할 것을 희망한다.

- 농군에서 농민 농민에서 농업인 글이나 말로만 대우하지 말고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발전적으로 하였으면 한다. 앞으로도 정말 농업인으로 대우 받았으면 한다.
- 직불제 전면적 확대, 면세유 계속 유지, 농협개혁 더 강화, 수매제 국회동의안 폐지는 찬성,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시설 보관시설 지원 확대 필요
- 농업지원 대책에 대해서 매사는 젊은이 위주로 시행함으로 고령자 배려도 감안해서 작은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 농촌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함이 더 중요하다. 농민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는 데는 정부의 설득과 교육이 필요하다.
- 농촌이 날로 붕괴되어 가는 이 시점에 쌀마저 완전 개방이 되면 우리 농촌은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게 농촌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삶을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냉혹한 국제 경쟁력 속에 우리 농업이 현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정부에서 농촌 농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농업정책중 가장 심각한 점은 농촌의 농가부채와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농가부채는 점진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반대 급부인 공산품 수출을 증대시켜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환원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2.2.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 채소류 등을 지역별로 분담하여 생산을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
- 농산물 가격 안정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수입 농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국산 농산물

을 보호 하는 것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 전 품목 가격 예시제, 지역별 특산품목 지정, 가격 정보 제공(매월) 등이 필요하다.
-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중간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 농산물 하락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 농민 전체가 농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나 도시민들이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알 것이다.
- 모든 농산물은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감시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 농촌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저가격에 판매되는 실정이며 외국산과 국산이 혼돈되어 시장 판매가 형성되는 실정으로, 정부는 외국산은 꼭 표시제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 공공요금이나 공산품은 모두 오르고 농산물 가격만 내리는 처사는 공평치 못하다고 본다.
- 모든 농산물의 생산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써주기 바란다.
- 정부는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 대파 파종시기에 전국적으로 정확한 외향 면적을 조사하여 과다 파종시에는 파종을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를 통하여 적극 권장했으면 한다.
- 정부와 농업 관계당국은 폐기되는 무, 배추를 정확히 조사하여 최저가이라도 보상해 주어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 유통 개혁을 꼭 좀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 농산물 판매가 어렵고 각종 농자재 값은 올라가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여 경영비를 제하면 수입은 적어 매년 부채만 늘어가는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통해 가격을 안정 시켜야 한다.

2.3. DDA/FTA 등 농업개방 협상 의견

- 농민이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입개방은 철저한 농업 농촌 보호 대책을 세우고 서서히 개방해야 한다.
- FTA, DDA 쌀 협상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 아무리 공업국으로 변한다 해도 농산물 수입 때문에 아우성치는 입장을 생각해서 공산품 수출 이익금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도 돌봐주어야 한다.
-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 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도 이해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농업인들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현실 때문이다.
- 정부는 쌀 수입을 개방하고 전자제품을 수출해서 얻는 이익금 중 일부를 농민에게 환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다른 분야 수출소득을 손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FTA협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들을 특별히 정부에서 배려를 않는다면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볼 때 희망이 없는 듯 하다.
- 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을 차별 없이 대해 주었으면 한다.
- 개방의 대세 흐름을 맞추어 그 상황에 꼭 맞는 협상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장기 발전 전략을 잘 연구하여 더디더라도 한 가지 정책이라도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으로 인해 농민이 손해 보는 것을 타수출 품목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적당부분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의 FTA추진은 지역과 농업인에게 전혀 맞지 않는 1회성이고 낭비성이고 더 망하는 사업만 골라서 하고 있다. 탁상행정은 농촌과 농민을 한번더 죽이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업개방정책을 무조건 미루지 말고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농정이 단결하여 대응하기를 바란다.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인하 및 농업인의 의욕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고 농민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한국 농업이 큰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이 종합되어 농업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설문 내용에 대한 정책이 꼭 반영되어 한국 농업이 앞으로 더 발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업인들을 위해서 농촌이 희생되면 기업인들에게 그 대가를 받아들이 농민들에게 환원 사업을 해 주기 바란다.
- 농업개방화로 인한 농촌의 피해화에 대한 보상책으로 전자, 자동차 수출 이익금을 농촌 살리기에 일부 환원하기를 바란다.

2.4. 추곡수매 등 쌀산업 정책에 대한 견해

- 쌀만큼은 개방의 폭을 완화해서 농촌의 주 소득원인 벼농사를 마음 놓고 지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농사만 지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 수매제도 폐지에 대해 매우 불만이다.
- 직불제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수매해 주었으면 한다.
- 쌀 생산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져야 한다.
- 정부 수매제도 폐지는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농지확대 방침에 반대한다.
- 정부에서 벼 수매를 폐지하고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총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쌀값 기준가격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쌀시장 개방은 막을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개방하고 농촌의 직불금으로 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 추곡 수매제는 꼭 필요하다.

- 정부에서 추곡 수매는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사기를 죽이는 정책이다.
- 온 국민이 단합만 된다면 쌀시장 개방은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벼 수매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추곡수매 연장, 쌀 수입 관세 보전, 농가 부채 상환 연장이 필요하다.
- 11월 11일 쌀 농가소득 안정방안 중 수취가격 17만원에 대하여 금년 당해는 적절하다고 해도 3년간 물가 변동(상승)에 비하면 쌀값 5% 하락 비율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른 물가 상승과 비교할 때 물가 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쌀농업에 있어서 농사꾼이 하는 일은 많은 벼를 생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벼는 정부 수매가 되든 민간 수매를 실시하든 전량 수매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려운 형편이다.
- 정부는 소정의 약정수매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우리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 정부가 양곡을 수매하여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한다.
- 정부계획대로 백미 80kg에 17만원 보장요망.
- 미, 맥 정부수매제도 확대 및 계속 유지, 정부수매가 금년에 4%인하에 대한 농업인 대우 외면, 정부수매가격 연초에 예시 요망.
- 추곡수매제를 폐지 할 경우 농촌 진흥지역도 폐지하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곡수매제도는 계속 추진하며 직불제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농촌이 살 길이다.
- 기능성 쌀 개발이나 친환경농법으로 농민은 생산에만 매달리고 농협은 유통을 전적으로 맡으며 행정부는 교육,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내년부터 정부수매를 앓는다고 하여 농민들은 걱정이 많다.
- 추곡수매제도는 2006년까지는 폐지되면 안된다.

- 쌀 가격 보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추곡 수매제 폐지를 반대한다.
- 벼 수매가는 연초에 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쌀가루도 밀가루처럼 이용방법을 연구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값이 생산비도 안 될 경우 농민은 농사를 못짓게 되고 다용도로 개발된 뒤 외국에서 싸게 수입하던 쌀값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다.
- 국익을 위해 쌀시장 개방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분야의 소득을 농민에게 환원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매상제도가 없어지면 홍수 출하가 우려된다.
- 생명산업 식량안보 이런 단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 생산 기반은 견고히 구축되도록 지켜야 한다.
- 쌀 협상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나 수매만은 있어야 한다.
-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업 농촌에 벼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쌀값을 17만원 선에서 3년간 유지해 떨어진 가격에서 80%선까지 2차액을 보상해 준다는데 추곡수매제 폐지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생각된다.
- 쌀 문제를 경솔히 생각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농지제도개선은 아주 잘한 일이다.
- 정부는 쌀, 보리, 콩 등 정책 농산물을 다각적으로 지정 공시하여 적정가격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를 하여야 한다.

2.5. 영농자금 · 농가부채에 의견

- 농촌에 회생자금 및 정책자금 등 각종 상호금융자금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바란다.
- 농가 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 전업농 지원금 지급 대상을 연령제한을 없애고 상환 능력이 있으면 누구

나 희망하는 농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 영농자금 금리 2% 인하, 상호금융자금 인하 5%선, 장기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 농가부채 탕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 농민의 빚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농가의 50%는 이자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 농촌인력 부족 및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견해

- 앞으로 십여 년 후면 농사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어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구상하기 바란다.
- 앞으로 50년 후에는 농업농촌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 농촌 인력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
- 농촌 인력 노령화에 무대책과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잘 수립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살아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촌인력 대책 문제와 농업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농촌은 노후화하여 기억력 상실, 노동력 감소 등으로 고소득 작목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농촌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
- 젊은 농촌후계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약간의 후계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한계가 있다. 도시에서 귀농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 젊은 농업인들에게 경영비나 시설비 및 개발비 등 여러 명목으로 막대한 투융자,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노약자에게도 농사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농촌에 젊은 신지식인이 와서 살 수 있게 구조개선하여 새 농촌이 되게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 정부에서 농촌을 지키는 원로 농민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

- 노령화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에서는 새로운 작물이나 유기농친환경 하나 계승할 인원이 부족하니 정부 시책으로라도 농촌이 젊어지도록 해야한다.
- 농민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농촌에 내일은 없을 것이다.

2.7. 농지 규제 완화 등 농지 정책에 대한 의견

- 정부 예산으로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고령화 은퇴 농업인 농지를 일괄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저리로 용자하여 매입 경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하루속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여 떠나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식량자급 확대와 농지 보전책 강화가 필요하다.
-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해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농지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 평야지역의 농지를 적극 보조하여 기본 비축 농산물로 하고 다른 지역(준산간, 산간 등)의 농지는 특수작물 및 2차 산업용지로 활용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용도 개혁이 있었으면 한다.
- 농업에 뜻이 있다면 농지 규모 대소를 막론하고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 도시민의 농지 취득은 비진흥지역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 농지 규모화 사업은 잘못된 점이 많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될 줄 안다.
- 농지법 개혁은 빨리 하여야 한다.
-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농지는 절대농지로 지정 하지 않고 고추밭, 포도밭, 대추밭은 절대농지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경자유전,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지전용 간소화가 필요하다.
-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휴경지가 많이 생긴다. 국가에서 매수하여 노동력 있는 자에게 대여했으면 한다.

- 진흥지역에만 편중된 혜택을 주는데 비진흥지역에도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농민은 적절한 농지를 소유하여야 농업에 의지를 가진다. 국민 건강 문제를 다루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대로 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이다.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땅을 일구어 열매를 따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위배되며 가뜰이나 부족한 농촌인력이 땅 투기의 들러리나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농촌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될 것이다.
- 농업인의 고령화로 경작을 포기하고 묵혀 버리는 토지가 급격히 늘어난 실정. 정책 당국은 그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2.8. 영농자재 수급 정책에 대한 의견

- 현 p.p 포대 40kg을 30kg으로 적게 제작해서 노인들 힘을 줄여줬으면 한다.
- 농기계 구입 시 정부에서 보조를 하였으면 한다.
- 농기계 부품 가격 인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농약가격이 너무 비싸다.
- 대형 농기계 구입에 정부 보조금을 주어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 농자재대 인상, 각종 세금 인상 등에 비해 농산물은 판매도 어렵지만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어 힘든 상황이다.
- 농기계 가격과 부품대금이 너무 과다 지출이 되니 쌀 전업농에게 논을 대여해 주어도 반의 수익 보장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만이 생계유지가 되는 형편이다.
- 요즈음 농가 부채는 농기계 부채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이 필요하다.
- 벼농사에 재초제 농약 무상 지원이 요망된다.
-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구입 시 용자와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규모에 따라 대형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 제도를 부활 시켰으면 한다.
- 전업농에게도 농기계 구입 정부보조 혜택을 주기 바란다.

- 농협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데 분기별로 지급하지 말고 조합원 희망에 따라 지급하도록 시행해 주기 바란다.
- 농업용 면세유가 3~4년 전 보다 50% 이상 줄어서 농가에 영농 계획 차질이 많다.
- 각 농약상마다 가격이 다르니 농약가격 안정을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 농기계 공급 값 인하가 절실하다.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 보험이 필요하다.

2.9. 농업 관련 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

- 농민 조합원은 땅문서 모두 저당 잡히고 죽어 가는데 농협 직원들의 보수는 고액이라고 생각하며 인사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 농어민을 위하여 조직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임직원들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 협동조합 개혁은 어느 단체보다도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한다.
- 농민은 오로지 생산에만 농협은 유통에만 신경 쓰고 시군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한다.
- 농업 협동조합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여 조합원이 만족 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란다.
- 농협개혁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의 개혁과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되도록 정부의 지도가 필요하다.
- 농수축협을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경제 분야에 치중할 수 있게 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를 전문화해야 한다.
-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
- 부실조합 합병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 농협 개혁 추진과 농업인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 농민을 위한 농협 수장의 연봉은 한 번쯤 재고했으면 한다.
- 농협중앙회 기구 축소 및 임원 재정비가 필요하다.
- 농협 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 조합 개혁법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조직과 지역조합의 열정 및 지역사회의 헌신과 봉사를 모르고 있다. 조합 개혁은 농협중앙회 운영지침으로 운영되므로 정부는 일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농협개편에 있어서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경제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 정부가 농민을 위하는 좋은 방법은 농협의 구조개선과 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판매를 담당해야 할 농협이 그 몫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농산물 개방은 세계화 추세로 이해하나 정치권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농민이 원하는 것은 농협개혁임을 직시해야 한다.
- 농협의 신경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충분한 경제파트의 예산지원 없이는 혼란만 초래한다고 본다.
- 지역 농협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 농협개혁을 현재 말로만 하고 있는 인상이다.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조합원을 위한 실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
- 농협중앙회 축소와 지역 농협을 활성화해서 지역 농협은 도시에 있는 농협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농협은 신용, 경제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알선과 유통체제를 제도화해 농민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조합의 인사문제, 지역조합 우수인력 확보, 조합 합병은 시급한 문제이다. 1군에 1조합이 적당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 농협개혁에 공감한다.
- 농지값, 쌀값, 공공요금에 비해 조합장 연봉이 너무 과다하다.
- 농협중앙회 중심에서 농협 연합회 중심으로 전화해야 하며 농자재와 생활 필수품의 시장 견제 세력에서 벗어나 시장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폐지되고 단일 지도체로서 시도 연합회 중앙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단위 농협 상임 조합장 임기를 2회 이상 못하도록 농협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 농협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
- 정부나 농민 사회 단체 등에서 농협을 개혁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조합원 가입(거리제한 및 구역 초월), 조합장 임기, 선거 등을 논의 하는데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본연의 목적대로 가느냐를 따져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 협동조합의 운영은 순수한 농업인 조합원 실익사업 위주로 되어야 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의 개혁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고 조합원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밑바닥에서부터 파악하여 정책 입안에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경제사업보다는 농민의 실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소매 과정의 가격차를 줄이고 실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서 농촌 부채를 농민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협개혁은 회원조합보다 중앙회 개혁에 우선 초점을 맞춰 시작해야 하고, 시군지부 통폐합, 중앙회 임직원과 회원농협간의 대등한 대우와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10.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에 대한 의견

- 농촌지역 이(통)장 제도 폐지 요망
- 농촌지역 노인들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 농촌 식수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지역에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농촌 복지시설 확충, 의료시설 확대와 농협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 모든 농촌은 이제 노령화가 심화돼 농촌 의료,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공무원과 직장인은 늙은 노부모를 모시면 각종 혜택과 부양 혜택을 주는데 농촌 농민은 80이 넘는 양친 부모님을 모셔도 정부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 정말 한심한 현실이다.
- 살기 좋은 농촌 환경과 시설개선 기반 조성을 하여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 농촌의 환경 식수 문제가 제일 우선이다. 준상수도라도 시설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
- 농촌 서민들은 자녀교육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

2.11. 영농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 산간지역 농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마비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농로 정비에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
- 경지정리와 농로포장이 필요하다.
- 농로포장, 수로정비, 하천정비가 미비하다. 이런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란다.
- 농촌의 수리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
- 농업기반 시설 확충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12. 기타

- 전에는 농정 현안 여론 조사를 많이 하였는데 근래에는 몇 번 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 산림을 자원화해서 이용하고, 산지를 활용하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농촌 경제 살리기 운동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순수 농사만 짓는 농민의 차에 대해 면세유 혜택을 줬으면 한다.
- 농촌 주소를 일정시대 명칭인 부락으로 하지 말고 마을로 했으면 한다.
- 복숭아 폐업 신고 및 폐업양이 부족하여 가격 하락이 우려되니 큰 피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 농산물을 국내 소비 수요에 맞게 생산하고 과잉 생산 될 때는 외국에 수출하여 일한 만큼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농산물 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생활 필수품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렵다.
- 논농업직불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 이 조사 결과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791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이 조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2004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쌀 관세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한-칠레 FTA가 발효되는 등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개방과 관련한 협상과 정부 대책에 대해 농업인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방에 따른 농업정책 수립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와 관련해 2004년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이 5년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매우 포함)’는 농업인은 10명 중 2

명(20.3%), 전년과 비교해서는 10명 중 1명꼴(10.2%)로 나타나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최근 2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7.8%로 전년(9.4%) 보다 1.6%p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전년(66.5%)보다 1.3%p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생활 만족도는(만족, 매우 만족) 10명 중 1명꼴(10.9%)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불만(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은 48.8%로 전년에 비해서는 3.3%p 낮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감소하였다. 농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28.8%) 꼽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미흡’(22.8%),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1%), ‘주거 환경의 열악’(18.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매우 불만 포함)’은 40.1%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7.7%p) 감소하였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중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에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20.5%로 집계됨으로써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 농업 종사의 불만족 요인은 ‘소득보장 미흡’을 가장 많이(40.8%) 꼽아 소득 불안정에 대한 불만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래 불안’(38.5%),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1.2%), ‘힘든 육

체적 노동'(8.9%), '좋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0.3%)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사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73.4%인 555명이 '선친으로부터 농사승계'라고 답해 대다수는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가해서 농사 창업'이 18.5%, '비농업에서 귀농'이 6.2%,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농업인은 25.3%로 전년(29.6%)보다 4.3%p 감소했으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별로, 전혀 합산)'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은 63.2%로 전년(59.2%) 보다 4.0%p 증가해 점차 농촌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관심도는 DDA, FTA,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쌀 관세화 협상 등 최근 통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21.9%), '농산물 수입개방'(10.3%), '농작물 병충해와 기상·기후 조건'(10.1%) 등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농사에 애로 사항으로 꼽혀온 것은 최근 수년간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 2004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63.8%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53.7%)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10.1%p 증가하였다.

2.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 WTO/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1.8%가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농업은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답하여 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농업인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농업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농업개방 폭의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9.4%에 그쳐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업개방 진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돼 2003년 조사 결과보다 적극 대응할 의사가 5.3%p 증가하였다.
- 농업인 52.9%는 WTO/DDA 농업협상과 FTA 등 대외통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는데, 정부의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6.8%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과반수에 가까운 48.5%로 집계되어 정부의 국제협상 대처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쌀 관세화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반수가 넘는 농업인(51.2%)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실익이 우선’이라고 응답하였

고, ‘관세화 유예의 무조건 관철’은 31.0%로 집계돼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 과반수에 가까운 농업인(45.0%)은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농촌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응답하였고, ‘농업인과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도 38.6%에 달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한 국내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으며, ‘쌀 산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도 18.5%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48.2%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쌀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인 10명 중 7명(71.8%)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2.5%로 나타난 반면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머물렀다.
-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 시키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농업인 10명 중 7명(70.1%)은 ‘정부’라고 응답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을(19.8%) 꼽은 농업인도 10명 중 2명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의 농업·농촌 문제에 역할이 미흡한 계층으로도

‘정부’라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으며,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11.8%)하고 있었다.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7%가 ‘고품질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를 꼽아 품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23.6%),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15.8%), ‘경영규모 확대’(1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3. 농정현안과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

- 참여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04년 한 해 동안 시행했던 주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농업인들의 평가는 ‘만족한다’(매우 포함) 7.7%, ‘불만족’(매우 포함) 52.5%로 전년(57.9%)에 비해 5.4%p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가 WTO/DDA, FTA, 쌀 관세화 협상 등에 따라 농업개방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추진한 쌀산업 정책, 농지제도 개선, 협동조합 개혁, 농가소득 안정망 마련 등 농업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18.2%가 ‘잘하고 있다(매우, 비교적 합산)’고 응답하였고, 39.5%는 ‘잘 못하고 있다(매우 포함)’고 응답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 ‘농지제도 개선’(16.2%),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14.6%) 등으로 응답하였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농업

여건 변화 정책 반영'(14.9%),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매우 포함)은 34.5%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 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 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았다.
- 농업인들은 향후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현 경작규모와 작부체계 유지'(42.7%), '경작규모 유지, 작부체계 변경'(33.3%), '영농규모 축소'(12.0%), '영농규모 확대'(5.6%), '잘 모르겠다'(6.3%)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주 소득원을 벼농사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영농규모와 작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과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매우 포함)에 대해 동의하였고,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 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

는 DDA 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인 6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고,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9.0%, ‘잘 모른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정도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매우적절’(13.4%), ‘적절한 편’(49.7%) 등 전체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2.2%에 그쳐 긍정적인 견해가 뚜렷하였다.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농촌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농업인은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매우 포함)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나 아직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30.6%),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역할 변화’(21.0%) 순으로 꼽아 농업인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협동조합 개혁 주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응답이 반수를 넘었으며 (60.9%), 다음으로는 ‘정부’(14.4%), ‘농민단체’(13.8%), ‘협동조합 임직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농업인 농정건의 등 여론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농업인들의 건의와 의견은 총 250건으로 전년대보다 23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 66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업 관련 기관, 특히 농협 개혁에 대한 건의가 38건으로 전년대보다 25건이나 증가하면서 농협개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 쌀 협상과 쌀산업 구조조정 대책 등의 발표로 추곡수매 등 쌀산업과 관련한 의견도 지난해보다 16건이 늘어난 36건이 제시되었다. 반면, 지난해 담보 상태를 보였거나 농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었던 DDA/FTA 등 농업개방과 관련한 의견은 10건이 줄어든 16건이 제시되었다.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고,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대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개방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농업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개방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반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방에 대응해 상당수 농업인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농정이 농업

인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현실감 있게 수립된다면 정책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농업의 여건 변화와 개방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산업 발전 방안과 농지제도 개편, 협동조합 개혁 등 정부가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감을 가늠할 수 있다.
- 다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과 FTA 추진을 포함한 농업개방 관련 협상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의지에 상당수 농업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내·외부의 개방 압력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현장 농업인 간의 현실인식에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조사표

「2004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에 즈음하여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연구원의 조사업무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협조해 주시는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어 설문지를 우송합니다.

본 조사는 농정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04년 12월 1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李 貞 煥

■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 1) 귀하는 5년 전에 비해 올해(2004년)의 ‘농촌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짐 ② 약간 좋아짐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짐 ⑤ 매우 나빠짐
- 2) 작년(2003년)과 비교해 올해(2004년) ‘농촌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짐 ② 약간 좋아짐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짐 ⑤ 매우 나빠짐

3) 올해(2004년)와 비교해 5년 후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 ② 현재와 마찬가지로 ③ 현재보다 악화될 것

4) 도시와 비교해서는 5년 후 농촌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②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다
③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 5), 6)번 문제 관련

< 보기 >

- ① 농산물 가격 ② 추곡수매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⑩ 농지문제(매매, 가격, 진흥지역, 임대차 등) ⑪ 기타

5)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6)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7) 올해와 비교해 내년(2005년) '농업 경영여건'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올해보다 나아질 것 ② 올해와 마찬가지로 ③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

8)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 ⑤ 매우 불만

9) (문 8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귀하는 농촌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 열악 ② 자녀 교육 여건 열악
③ 체육·보건 의료 시설 등 복지시설 미흡 ④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⑤ 기타 ()

10) 귀하는 어떤 계기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까? ()

- ① 선천으로부터 승계 ② 분가하여 농사 창업 ③ 비농업에서 귀농 ④ 기타 ()

11)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 ⑤ 매우 불만

12) (문 11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13) 귀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유리하다 ② 비슷하다 ③ 불리하다 ④ 본인 하기에 달렸다 ⑤ 모르겠다

14)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비교해 볼 때, 귀하는 현재의 농촌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도시보다 매우 못산다 ② 도시보다 못사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④ 도시보다 잘 사는 편이다 ⑤ 도시보다 매우 잘 산다

15) 귀하는 장래에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오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③ 아직 모르겠다 ④ 별로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⑤ 전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16)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의제(DDA) 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농업이 발전할 것이다.
 ② 커다란 영향 없이 현재 수준 정도의 농업이 유지될 것이다.
 ③ 국제경쟁력이 낮아 우리 농업은 크게 쇠퇴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통상협상결과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라고 생각한다
 ② 정부와 국민관심 정도에 따라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막을 수는 없지만 농업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④ 막을 수도 없고, 개방 폭의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잘 모르겠다

18) 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쌀 재협상, FTA(자유무역협정) 등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계획입니까? ()

- ① 대체 작목 개발 등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 ②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투자 등 대안 마련
- ③ 농사 포기 후 전직을 위한 준비
- ④ 개방 진행 상황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
- ⑤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 ⑥ 기타 ()

19) 귀하는 WTO DDA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농업개방은 최소화 해야한다
- ② 농업도 다른 산업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협상해야 한다
- ③ 협상 결과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20)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해 나아가고 있다 ② 비교적 잘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잘 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1) (문 20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정부의 국제협상 대처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 ② 상대국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다
- ③ 여론수렴이 미흡하다 ④ 협상 내용 공개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 ⑤ 기타 ()

22)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개방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귀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무조건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야 한다
- ② 관세화(완전개방)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③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개방 어느 쪽이든 실익이 우선이다
- ④ 잘 모르겠다

23)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쌀 시장 개방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우리 농업·농촌 전반을 침체시킬 것이다
- ② 쌀산업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 ③ UR 이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다
- ④ 오히려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⑤ 농업인과 정부 등 관련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 ⑥ 기타 ()

24) 정부가 쌀 협상 국내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절한 조치로 소득 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 ② 실효성이 없는 임시 방편이다
- ③ 쌀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 ④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25) 쌀 협상 등을 감안해 내년(2005년) 벼 재배면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축소할 계획이다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확대할 계획이다
- ④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26) 귀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속에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인 ② 정부 ③ 일반국민(납세자) ④ 학계 ⑤ 언론 ⑥ 기타 ()

27) 귀하는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에 누구의 역할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인 ② 정부 ③ 일반국민(납세자) ④ 학계 ⑤ 언론 ⑥ 기타 ()

28) 귀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②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총소득 증대
- ③ 고품질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 ④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
- ⑤ 기타()

■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29)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얼마큼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30) 귀하는 ‘참여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민의 정부’ 등 지난 정권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31) 쌀산업정책, 농지제도 개선, 협동조합개혁, 농가소득 안정 등 국제농업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업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해 나가고 있다 ② 비교적 잘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 ② 농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③ 농지제도 개선
④ 축산업 등록제와 낙농산업 현안 해결 ⑤ 한-칠레 FTA 후속대책 마련
⑥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어젠다 농업협상(DDA) ⑦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⑧ 기타 ()

33)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농업구조조정 등 농업 여건 변화 정책반영 ②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③ 농업 기반시설 확충 투융자 확대 ④ 쾌적한 농촌 건설을 위한 투융자 확대
⑤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 ⑥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⑦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⑧ 농촌 생활 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⑨ 기타 ()

☞ 34)~37)번 문제 관련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농가의 최근 실질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17만원/80kg) 설정하고, 목표가격의 98% 수준(쌀값 5% 하락 가정)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4) 귀하는 농업소득 가운데 쌀소득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 ① 100% ② 75~99% ③ 50~74% ④ 25~49% ⑤ 25% 미만

35) 귀하는 이 같은 직접지불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6) (문 35번에서 ④,⑤ 응답자만)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목표가격이 낮아 농가소득하락 실질적으로 보전 못해
 ② 고정형 직불금액 ha당 60만원은 낮은 수준
 ③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조치
 ④ 추곡수매 폐지 전제로 하고 있어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
 ⑤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제한으로 지역별 소득 불균형 초래
 ⑥ 기타 ()

37) 정부는 향후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영농규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① 영농규모 축소 ② 현 경작규모 유지, 작부체계도 유지
 ③ 현 경작규모 유지하되, 작부체계는 변경 ④ 영농규모 확대
 ⑤ 잘 모르겠다

☞ 38)~40)번 문제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비상 시에 대비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쌀개방 협상과 DDA 협상에 대비해 추곡수매 중심의 쌀산업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 귀하는 이같은 양정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39) 양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0) (문 39번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내년부터(2005년) 당장 도입해야 한다
- ②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
- ③ 잘 모르겠다

☞ 41)~45)번 문제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와 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41) 귀하는 이같은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 42) 귀하는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 43) (문 42번에서 ①번 응답자)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 44) (문 43번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농지제도 개편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
- ① 농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② 농지 구조조정 촉진
 ③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④ 농촌지역 활력 증진
 ⑤ 기타 ()
- 45) (문 43번에서 ④,⑤번 응답자만)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다 ② 도시민들의 농촌투기가 극심해 진다
 ③ 국토의 난개발이 급증할 것이다 ④ 우량농지의 잠식이 급증할 것이다
 ⑤ 농지법 개정에 따른 개발 이익이 도시민에게만 갈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 46) 귀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아닌 편이다 ⑤ 전혀 아니다

47) 귀하는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회 조직 및 인력과 보수 문제 ②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역할 변화
③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 ④ 기타 ()

48) 귀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협동조합 임직원 ② 조합원 ③ 정부 ④ 농민단체 ⑤ 기타 ()

■ 현지통신원 개인 정보

A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道, 또는 광역시

A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세 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5> 귀댁의 연평균 소득(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중 임차료·비료·농약대 등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미만 ⑥ 5천만원 이상

A6>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A7> 귀댁의 전체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A8>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참 고 문 헌

-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농촌경제』, 2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3. 『2002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연구자료 D1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4. 『2003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연구자료 D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남, 최익수. 1982.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완배 외,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통계청 학술연구용역, 서울대학교
- 김정호 외, 2001,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정책연구보고 P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2003. 『농림업 주요통계』
- 농협조사월보, 2004. 12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황의식. 2002. 『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 R4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보고 R4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전망 200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3.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황의식,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분석』 연구보고 R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96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